

2023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지역, 국가와 고등교육 경쟁력 : 전망과 과제

- 자유주제 발표 세션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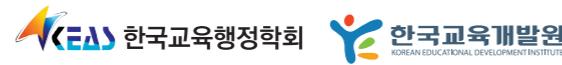
2023. 12. 2.(토) 11:00~12:00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



2023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자유주제 발표 세션Ⅳ

2023.12

한국교육행정학회



이 발표논문집은 2023년도 정부 자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NRF-2023S1A8A4A010890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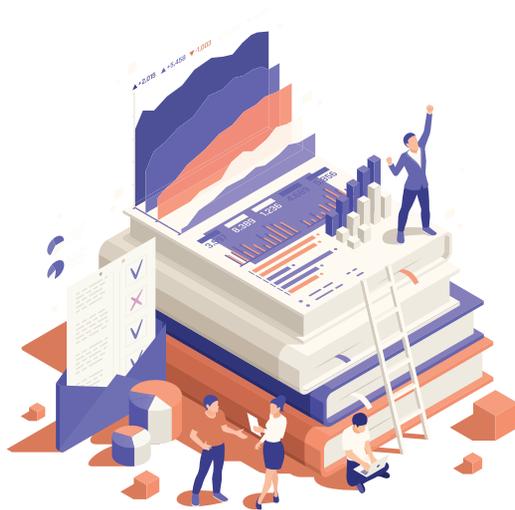
2023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지역, 국가와 고등교육 경쟁력 : 전망과 과제

- 자유주제 발표 세션Ⅳ -

2023. 12. 2.(토) 11:00~12:00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



공동주최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주관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
한국지방교육연구소



FOUR 21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양성사업단

프로그램

발표 및 내용

일정		발표 및 내용	
등록		자유주제 발표 페널	
9:00 ~ 9:30		신진학자 패널	자유주제 발표 페널
1부	9:30 ~ 10:50	<p style="text-align: center;">〈논문경진대회 세션 I〉 201호</p> <p>좌장: 서화정(대구대)</p> <p style="text-align: center;">[발표자]</p> <p>1. 홍희경(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1. 황현철(제주대 박사과정) 외 2. 구지연(이화여대 석사과정) 2. 유진실(충남대 석사과정) 3. 김수지(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3. 김항란(제주대 박사과정) 외 4.곽소영(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4. 황정훈(서울대 박사과정)</p>	<p style="text-align: center;">〈논문경진대회 세션 II〉 202호</p> <p>좌장: 정재영(이화여대)</p> <p style="text-align: center;">[발표자]</p> <p>1. 이영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서시연(해밀초 교사) 3. 문화원(서울대 강사) 4. 황재운(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교수) 외</p>
		<p style="text-align: center;">〈신진학자 위원회 세션〉 101호</p> <p>좌장: 김훈호(공주대)</p> <p style="text-align: center;">[발표자]</p> <p>1. 신현석(고려대 교수) 외 2. 이고은(서울교대 박사과정) 외 3. 배소현(한국에너지공과대 대우교수) 외</p>	<p style="text-align: center;">〈자유주제 발표 세션 I〉 302호</p> <p>좌장: 서재영(한남대)</p> <p style="text-align: center;">[발표자]</p> <p>1. 최예슬(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외 2. 유성동(한국교원대 박사과정) 외 3. 김영빈(한국교원대 박사과정) 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지방교육연구소 세션〉 202호</p> <p>좌장: 이슬아(한남대)</p> <p style="text-align: center;">[발표자]</p> <p>1. 이수경(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위원) 2. 왕문혜(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위원) 3. 이호준(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위원) 4. 김용준(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원) 5. 이다현(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원)</p>	<p style="text-align: center;">〈자유주제 발표 세션 III〉 303호</p> <p>좌장: 차성현(전남대)</p> <p style="text-align: center;">[발표자]</p> <p>1. 주후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 이진권(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3. 고은애(조선대 박사과정) 외</p>
		<p style="text-align: center;">〈한문후속세대 세션 I〉 201호</p> <p>좌장: 서화정(대구대)</p> <p style="text-align: center;">[발표자]</p> <p>1. 김인재(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2. 장수정(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3. 김유정(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4. 강영애(이화여대 박사과정) 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교육개발원 세션〉 101호</p> <p>좌장: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p> <p style="text-align: center;">[발표자]</p> <p>1. 조한성(청주대 교수) 2. 이정우(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p> <p style="text-align: center;">[토론자]</p> <p>종합토론. 최정윤(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1. 박관규(대한민국의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2. 김규용(충남대 교수) 3. 심우정(한남대 교수) 4. 박성욱(공주대 교수)</p>
10:50~11:00		휴식 시간	
11:00 ~ 12:00		단체 및 기관 발표 페널	
2부	11:00 ~ 12:00	<p style="text-align: center;">〈한문후속세대 패널〉</p> <p>좌장: 서화정(대구대)</p> <p style="text-align: center;">[발표자]</p> <p>1. 김인재(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2. 장수정(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3. 김유정(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4. 강영애(이화여대 박사과정) 외</p>	<p style="text-align: center;">〈자유주제 발표 세션 IV〉 303호</p> <p>좌장: 심현기(공주대)</p> <p style="text-align: center;">[발표자]</p> <p>1. 민윤경(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외 2. 박선형(동국대 교수) 3. 류명혜(서울대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위원)</p>
		<p style="text-align: center;">〈논문경진대회 세션 III〉 201호</p> <p>좌장: 이슬아(한남대)</p> <p style="text-align: center;">[발표자]</p> <p>1. 이수경(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위원) 2. 왕문혜(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위원) 3. 이호준(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위원) 4. 김용준(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원) 5. 이다현(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원)</p>	<p style="text-align: center;">〈자유주제 발표 세션 V〉 303호</p> <p>좌장: 차성현(전남대)</p> <p style="text-align: center;">[발표자]</p> <p>1. 주후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 이진권(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3. 고은애(조선대 박사과정) 외</p>
12:00~13:30		점심시간 및 이사회	

프로그램

일정	발표 및 내용	비고	
3부	13:30 ~ 13:40	개회사: 김병주 (본 학회 회장, 영남대학교 교수) 환영사: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축사: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축사: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사회자: 구성우 (신한대)
	13:40 ~ 14:20	기획세션 1.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과제	
	14:20 ~ 15:00	발표자: 차성현 (전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이정미 (충북대학교 교수)	좌장: 나민주 (충북대)
	14:20 ~ 15:00	기획세션 2.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과제	
	15:00 ~ 15:30	휴식시간	
	15:30 ~ 16:10	기획세션 3.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	좌장: 나민주 (충북대)
	15:30 ~ 16:10	발표자: 남수경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훈호 (공주대학교 교수)	
	16:10 ~ 16:50	기획세션 4.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관리 및 평가 방향	좌장: 나민주 (충북대)
	16:10 ~ 16:50	발표자: 서지영 (용인대학교 교수) 토론자: 백승주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소장)	
	16:50 ~ 17:30	학술대회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 좌장: 김도기 (본 학회 부회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사회자: 구성우 (신한대)
17:30 ~ 18:00	(사) 한국교육행정학회 총회 - 시상식: 논문경진대회 시상식, 소석논문상 수상, 주삼환리더십상 수상, 공로패· 송공패·학위취득기념패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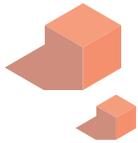
1부 자유주제 발표 [9:30 ~ 10:50]

학문후속세대 패널

논문경진대회세션 I <강의실 201호>

좌장: 서화정(대구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기업가 정신 교육 개선 방안 연구: 학생 소감문 분석을 중심으로	홍희경(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엄지윤(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2	청소년의 학업과 여가시간 활용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영향요인 탐색	구지연(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3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성인문해교육 정책, 연구, 언론 부문 핵심 키워드 및 토픽 분석	김수지(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송민희(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노한나(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4	일본의 '몬스터 페어런트(monster parent)'는 누구인가?	곽소영(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김가영(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학문후속세대 패널

논문경진대회세션 II <강의실 202호>

좌장: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학령기 발달장애 양육 부모의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황현철(제주대학교 박사과정) 오승천(제주대학교 박사과정) 홍지환(제주대학교 박사과정)
2	대학원 경험 및 연구 효능감과 연구 성과의 관계 탐색	유진설(충남대학교 석사과정)
3	NIE 지도사의 신문활용교육 지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향란(제주대학교 박사과정) 김은영(제주대학교 박사과정)
4	초등학교 남교사의 여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충 탐색: 성역할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황정훈(서울대학교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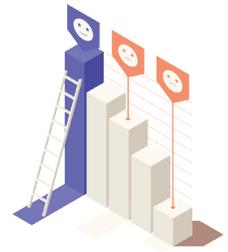


신진학자 패널

신진학자위원회 세션 <강의실 101호>

좌장: 김훈호(공주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대학평가정책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이영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교육과정 실행의 미시정치: 자율 초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사례를 바탕으로	서시연(해밀초등학교 교사)
3	학부모 학교참여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 참여 격차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	문희원(서울대학교 강사)
4	학문적 정체성 관점에서 본 학교장 리더십 국내 연구동향 분석	황재운(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연구교수)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자유주제 발표 패널

자유주제 발표 세션 I <강의실 302호>

좌장: 서재영(한남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한국 교육행정학 분야 질적 연구의 질 평가: 「교육행정학연구」를 중심으로	신현석(고려대학교 교수) 정수현(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윤혜원(서울상천초등학교 교사) 주영효(경상국립대학교 교수)
2	초등학교 교사의 예산 운용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꿈실 사업을 중심으로	이고은(서울교육대학교 박사과정) 김두섭(서울교육대학교 박사과정) 오범호(서울교육대학교 교수)
3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한 소규모 이공계 대학의 강의만족도 분석	배소현(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우교수) 김지현(성신여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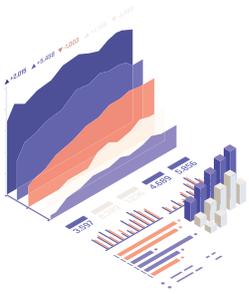


자유주제 발표 패널

자유주제 발표 세션 II <강의실 303호>

좌장: 이호준(청주교육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교육학 연구에서 무선헌당 실험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활용 실태와 향후 과제	최예슬(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박소정(고려대학교 연구교수)
2	다층선형모형을 활용한 교수효능감 영향요인 탐색	유성동(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이재덕(한국교원대학교 교수)
3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초등돌봄교실정책 분석	김영빈(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이재덕(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부 자유주제 발표 [11:00 ~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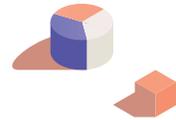
학문후속세대 패널

논문경진대회 세션 III <강의실 201호>

좌장: 서화정(대구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개정 교육과정 언론보도 분석 :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김인재(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구태진(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2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분야 교원 연수 정책 분석	장수정(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이선희(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3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모형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정책 분석	김유정(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이정민(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4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연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을 중심으로	강영애(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김건아(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단체 및 기관 발표 패널

한국교육개발원 포럼 <강의실 101호>

좌장: 최정윤(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지역-대학 협력의 대전환기 고등·평생교육정책의 혁신과제

11:00~11:05	소개	KEDI연구 및 기관세션 소개 최정윤(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장)
11:05~12:35	발표	지자체와 지역대학 협력의 법제도적 토대와 그 개선방향 조한상(청주대학교 교수) 고등교육에서의 성인학습자 재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이정우(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토론 “지역-대학 협력의 대전환기 고등·평생교육정책의 주요 이슈, 개선 방향 설정”		
12:35~12:55	토론	[토론1] 박관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토론2] 김규용(충남대학교 교수)
		[토론3] 심우정(한남대학교 교수)
		[토론4] 박상옥(공주대학교 교수)
12:55~	종합 및 폐회	

단체 및 기관 발표 패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발표 세션 <강의실 202호>

좌장: 이슬아(한남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교육지원청 조직문화 혁신 촉진요인 분석	이수경(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나민주(충북대학교 교수)
2	지방교육에 관한 정책, 행정, 연구 동향분석	왕문혜(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나민주(충북대학교 교수) 박수정(충남대학교 교수) 한은정(인천대학교 교수) 서재영(한남대학교 교수) 이슬아(한남대학교 교수) 오혜근(충북대학교 박사과정)
3	시도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및 성과 비교	유호준(한국지방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나민주(충북대학교 교수)
4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교육정책 의제 동향 분석	김용준(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원) 나민주(충북대학교 교수)
5	학교지원조직 유형별 조직업무, 조직구성원, 조직성과 비교 분석	이다현(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원) 나민주(충북대학교 교수)

자유주제 발표 패널

자유주제 발표 세션III <강의실 302호>

좌장: 차성현(전남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광역자치단체 대학지원 RISE 체계 수립의 쟁점과 과제	주희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	대학재정지원에서의 재정적 중립성(Wealth Neutrality) 검토: 정부의 대학재정지원과 재학생의 소득수준 간 관계 분석	이진권(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3	타 지역 학생들은 왜 지방 사립 C대학을 선택했나	고은애(조선대학교 박사과정) 송경오(조선대학교 교수)



자유주제 발표 패널

자유주제 발표 세션IV <강의실 303호>

좌장: 심현기(공주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Cooper 외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의 유용성과 한계점 탐색	민윤경(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김두섭(개봉초등학교 교사)
2	교육행정학의 가치기반 이론발달 탐구: 관련 쟁점과 실천 방안	박선형(동국대학교 교수)
3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 방안 탐색	류명혜(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목 차

[2부] 자유주제 발표 세션Ⅳ

Cooper 외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의 유용성과 한계점 탐색1p

발표: 민윤경(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김두섭(개봉초등학교 교사)

교육행정학의 가치기반 이론발달 탐구: 관련 쟁점과 실천 방안19p

발표: 박선형(동국대학교 교수)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 방안 탐색51p

발표: 류명혜(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자유주제 발표 세션Ⅳ

Cooper 외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의 유용성과 한계점 탐색

민 윤 경(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김 두 섭(개봉초등학교 교사)

I. 서 론

한국 교육학 이론의 부재는 오랫동안 한국 교육학이 고민해 온 문제이다. 그것은 비단 교육학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학문들 대부분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국내 많은 연구들이 외국의 이론이나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중에서도 Cooper 외(2014)의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 모형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한국 교육을 분석하는 데 이를 활용해 왔다.

김현준(2009)은 체계적·비판적 검증 없이 외국의 정책분석이론을 한국교육정책에 적용한 연구들에 대해 비판하였다. 김태은(2015) 역시 한국에서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가 서구 이론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ooper 외의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모형 역시 그 유용성 만큼이나 이론적 분석틀로서 한계점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Cooper 외의 다차원 정책분석틀의 특징과 한계점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고, 향후 Cooper 외의 이론적 분석틀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Cooper 외의 정책분석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과 동시에 향후 한국 교육정책 분석이 보다 잘 이루어지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론(theory),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

사회과학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론, 이론적 틀, 개념적 틀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 간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Varpio, et al., 2020). 이 장에서는 이 세 용어를 정의하고, 사회과학 연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theory)이란 추상적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일반화하여 진술한 것으로 현상들 간 또는 현상들 사이의 관계나 연결을 설명하거나 예측한다(Kivunja, 2018; Sutton & Staw; 1995; Varpio, et al., 2020). 이론에 의한 일반화는 우리로 하여금 단 하나의 나무 대신 숲을 볼 수 있게 한다(Kivunja, 2018). Kerlinger & Lee(2000)는 이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론은 서로 관련된 개념들(구성개념), 정의들, 그리고 명제들의 집합으로 개념들 간의 관계를 명시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이론은 정의되고 서로 연관된 개념(constructs)들로 구성된 명제들의 집합체이다, (2) 이론은 구성 개념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그 구성개념을 통해 설명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3) 이론은 현상을 설명한다.

출처: Kerlinger & Lee, 2000; Kivunja, 2018: 45 재인용

이론은 서술적(즉, 현상을 명명하고 특징을 설명하는 것), 설명적(현상 간 관계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 해방적(어떤 민족의 억압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 혁신적(기존의 지식을 확장하거나 그것을 논박하는 것), 또는 예측적(특정 입력에 기반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일 수 있다(Varpio, et al., 2020). 이러한 일반화, 즉 이론의 구축은 마이크로 수준(micro level), 중범위 수준(meso or middle-range level), 매크로 수준(macro level)에서 이루어진다(Kivunja, 2018; Varpio, et al., 2020).

마이크로 수준에서 이론은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한다(Kivunja, 2018; Varpio, et al., 2020). 마이크로 수준에서의 이론으로는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사회 교환 이론(social exchange theory), 사회생활을 연극 무대에서의 연기에 비유하여 개인이 타인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얼빙 고프만의 연극 이론(dramaturgical theory) 등이 있다.

중범위 수준 이론은 기관 수준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자 한다(Kivunja, 2018; Varpio, et al., 2020). 조직 내 문화가 어떻게 구성원들의 행동, 태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조직 문화 이론(organizational culture theory), 개인과 집단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얻는 자원과 성과를 탐구하는 사회 자본 이론(social capital, theory), 개인과 집단 간 상호작용을 교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사회적 교환 이론(social exchange theory) 등이 메소 수준에서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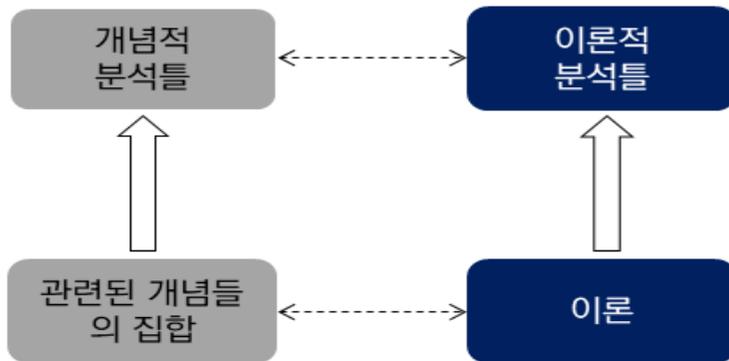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매크로 수준의 이론은 좀 더 광범위한 자연적 또는 사회적 유형들, 예를 들면 특정 인종 집단에서의 젠더 문제라든지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자 한다(Kivunja, 2018; Varpio, et al., 2020). 사회를 복잡한 시스템으로 보고 각 부분이 사회의 안정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구조 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사회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라 보고 특히 권력과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갈등 이론(conflict theory) 등이 매크로 이론에 해당한다.

한편, 이론적 분석틀이란 하나의 이론 혹은 여러 이론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나 논문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Varpio, et al., 2020). 이론적 분석틀은 여러 개념과 이론을 요약한 구조로 구성되는데 이는 연구자가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며, 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Kivunja, 2018; Tamene, 2018).

마지막으로 개념적 분석틀이란 전체 연구 프로젝트를 총괄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개념화한 것을 의미한다(Kivunja, 2018). 개념적 분석틀은 다른 어딘가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구축하며, 여기에는 연구자가 특정 주제를 연구하기로 한 이유, 연구에 대한 가정, 연구에서 사용하는 접

근 방식이 어떤 개념들을 토대로 하고 있는지 등이 제시된다(Tamene, 2018). 개념적 분석들은 (1) 주로 문헌 고찰을 통해 알려진 지식의 상태를 기술하고, (2)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서 부족한 점(gaps)을 규명하고, (3) 연구 프로젝트의 방법론을 개관한다(Varpio, et al., 2020). 따라서 개념적 분석들에는 연구 주제, 조사 문제, 질문, 검토 문헌, 적용 이론, 연구 방법, 절차 및 측정 도구, 데이터 분석 및 결과 해석 등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Kivunja, 2018). 이처럼 연구자는 개념적 분석들을 통해 왜 이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지 정당화한다(Varpio, et al., 2020).

그렇다면 이론적 분석들과 개념적 분석들은 어떻게 다른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론적 분석들은 ‘이론’ 으로부터, 개념적 분석들은 ‘개념’ 으로부터 구축된다고 볼 수 있다. Tamene(2018)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나타냈다.



[그림 1] 개념적 분석들과 이론적 분석들의 관계

출처: Tamene(2018)

이론 혹은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이해 및 해석하여 이론적 분석들이 마련된다. 이론을 통해 관련 개념들을 수집한다. 이러한 개념들 및 이론적 분석들을 종합하여 개념적 분석들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Varpio, et al.(2000)는 이론, 이론적 분석들, 개념적 분석들의 관계를 [그림 2]의 밴다이어그램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Tamene(2018)이 각 개념들 간의 상호 작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반면, Varpio, et al.(2000)는 각 개념들을 단계별로 인식하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Varpio, et al.(2000)는 양적 연구방법(객관적 연

역법)과 질적 연구방법(주관적 귀납법)에 따라 위 개념들의 활용이 다르다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객관적 연역법은 외부에 실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실재는 이에 관한 객관적, 불편향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객관적 연역 연구는 이론을 선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음으로 이론적 분석틀의 단계에서 왜 현재의 맥락에서 주어진 이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지, 관심 변수와 조건들을 밝힌다. 개념적 분석틀에는 관련 문헌 기술, 관련 이론 요약, 왜 이 이론이 현 맥락에서 필요한지와 함께 가설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포함한 연구 질문이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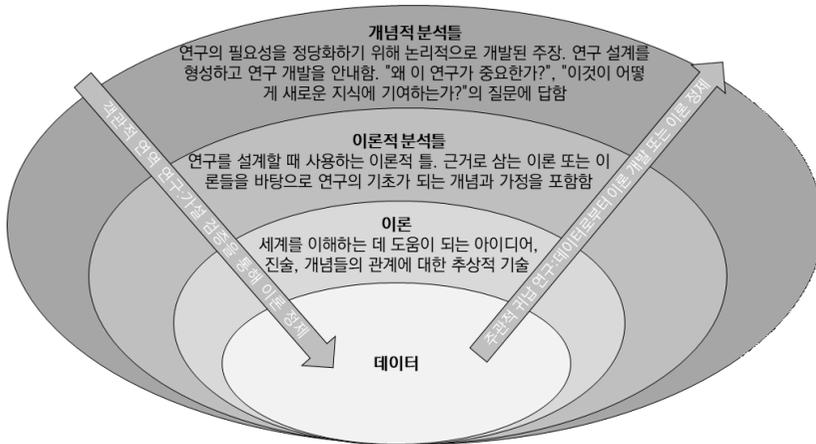
반면, 주관적 귀납법은 특정 현상 또는 특정 현상에 대한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로부터 출발한다. 주관주의적 귀납적 연구자들은 (1) 실재는 사회적·경험적으로 구성되며, (2) 이러한 실재들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는 개인과 집단에 의해 구성된 의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다(Varpio, et al., 2000).

주관적 귀납 연구에서 이론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Varpio, et al., 2000).

첫째, 이론은 연구의 출발이 아닌 연구의 산물이 될 수 있다. Glaser & Strauss의 근거 이론이 그 대표적인 예로 이들은 데이터로부터 이론을 생성한다. 따라서, 이론은 연구 설계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결과물이다.

둘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론들이 전체 연구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 즉, 이론은 연구 질문 개발, 방법론적 선택,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연구 결론 등을 포함한 연구 과정의 모든 단계를 형성한다.

셋째, 이론은 해석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안 많은 이론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칠 때까지 어떤 이론 혹은 이론들이 최종 해석과 결론에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자료에 대한 기피 있는 탐색 결과 특정 이론이 연구에 적합하다는 것이 드러나며 때로는 연구의 최종 결과로서 이론의 개발 또는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림 2] 객관적 연역 연구와 주관적 귀납 연구에서의 이론, 이론적 분석들, 개념적 분석들의 차이

출처: Varpio, et al.(2000)

2. Cooper 외의 다차원 정책 분석들

이 절에서는 Cooper 외의 다차원 정책 분석들을 살펴보고, 이를 앞의 이론과 관련한 논의들에 근거하여 Cooper 외의 다차원 정책 분석들이 갖고 있는 특징 및 한계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Cooper 외(2014)는 「좋은 정책 좋은 학교: 이론과 적용」이라는 책에서 주요한 정책 결정 이론으로 체제 이론, 신다윈주의 옹호 연합 및 이익집단 이론, 신제도주의 이론, 비판 이론, 여권주의 이론, 후현대주의를 제시하며 이들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Cooper 외(2014)에 따르면 이 중 체제 이론, 신다윈주의 옹호 연합 및 이익집단 이론, 신제도주의 이론은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론인 반면, 비판 이론, 여권주의 이론, 후현대주의는 해석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체제 이론은 투입-전환-산출의 단계를 통해 정책이 형성되며 이를 둘러싼 환경을 개방 체제로 간주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복잡한 과정이나 정책이 학교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Cooper et al., 2014). 이처럼 체제 이론은 합리적이고, 단계 지향적이며 직선적이지만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세부적인 것들을 간과한다는 단점이 있다(Cooper et al., 2014).

신다원주의 옹호 연합과 이익집단 이론에서는 정치 연합 및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들을 중시한다(Cooper et al., 2014). 다른 분야 및 기관의 핵심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연합과 파당, 이기기 위한 타협안 마련 등이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옹호 연합 이론은 ‘정책 과정’ 전반 보다는 로비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정책의 목표와 그러한 목표가 잘 수행되었는지를 비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Cooper et al., 2014).

신제도주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질서를 마련하는 이념적이고, 구조적인 장치” (Gibulka, 1997, Cooper et al., 2014 재인용)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적 구조가 개인의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상이한 제도적 구조는 상이한 정책을 가져온다고 본다(Pal, 1992, Cooper et al., 2014 재인용). 기존에 정책의 구조와 과정에 있어서 미시적 행위자나 거시적 국가의 역할에 주목했던 다원주의, 행태론, 국가론 등에 반하여 1980년대 이후 정책연구에 있어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도입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김선희, 2020). Cooper 외(2014)는 이러한 신제도주의에 대해 제도가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한 이론적 명제가 부족하고, 하나의 이론 내에 차이가 큰 분과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비판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와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이념적 토대를 두고 있으며, 학교 체제가 권력을 사용하여 다른 행위자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며 일부 행위자들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비판한다(Popkewitz, 1999; Cooper et al., 2014 재인용). 그러나 권력 분배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정책 과정에 대한 관심이 적고 평등 이외 다른 사회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사회 체제의 변화 및 발전보다는 유지를 설명하는 데에만 유용하다는 한계점이 있다(Cooper et al., 2014).

여권주의 이론은 여성이 역사적·구조적 제약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고 보고(디킨스, 폰타나, 1996) 성차별적 정책들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제정 및 시행된다고 주장한다(Cooper et al., 2014). 후현대주의는 실증주의와 합리주의가 전제하는 가치중립성을 거부하면서 보편적 지식 또는 진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다. 교육 정책에서 어떤 것이 ‘문제’로 대두되는 데에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정책에서 이데올로기적 관점은 지식과 정책이 이데올로기, 관점의 산물이며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을 의미

한다(마이클 애플, 2023; Cooper et al., 2014).

Cooper 외(2014)는 비판 이론, 여권주의 이론, 후현대주의, 이데올로기적 관점 등이 갖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가장 좋은 정책은 없다는 입장을 경계하면서 더 좋은 정책을 통해 학교를 개선하자는 것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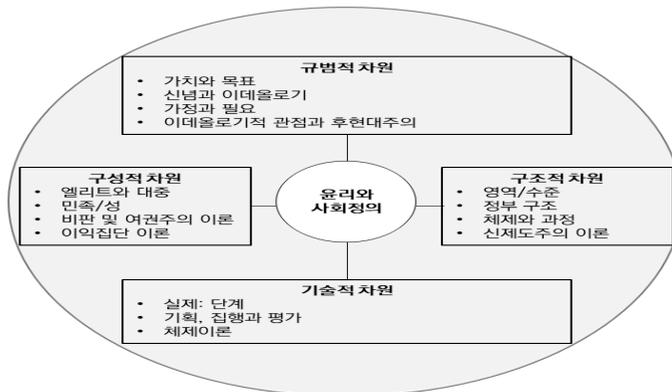
이와 같이 Cooper 외(2014)는 정책 분석에 있어 각 이론들의 장점과 단점을 차례로 언급한 뒤 이러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 모델과 개념들을 이해” (p. 63)하기 위해 “종합적이면서도 단순한 4가지 범주의 개념적 틀을 개발” (p. 63)하였다고 밝히면서 정책 이론의 4차원적 관점(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을 제시한다. Cooper 외(2014)에 따르면 각 차원은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이론들과의 관련성을 갖는다.

첫째, 규범적 차원은 정책에 나타나는 신념, 가치와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으로 후현대주의와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규범적 차원에 속한다.

둘째, 구조적 차원은 교육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형태, 기관의 구조, 시스템 및 과정” (Cooper et al., 2014: 63)을 의미하며 신제도주의 이론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구성적 차원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고 받는 다양한 구성원들과 관련되어 있다. 정책의 행위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비판 및 여권주의 이론, 신다원주의 옹호 연합, 이익집단 모델 등이 구성적 차원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은 정책 기획, 실제, 집행 및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체제 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 3] 정책 이론의 4차원적 관점

출처: Cooper et al.(2014)

이러한 Cooper 외(2014)의 정책분석들은 정책을 둘러싼 복잡한 환경과 이해관계자들, 고려해야 할 많은 요인들을 4차원으로 간단 명료하게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들로 하여금 정책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 각 차원에 속하는 규범적 차원으로서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 구조적 차원으로서 정책을 추진하는 체제 및 과정, 구성적 차원으로서 정책의 추진 과정 및 실행에 개입하는 다양한 구성원들, 기술적 차원으로서 정책의 도입, 집행과 평가 등을 살펴봄으로써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Cooper 외(2014)의 다차원 정책분석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일곱 가지 이론의 선택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왜 이들 이론을 택했는지에 관한 기준이나 명확한 설명 없이 이론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저자들은 이들 이론들을 종합하였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론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론을 각 차원으로 분류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즉, 앞 절에서 논의한 ‘이론을 선택’ 한 후 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론적 분석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론의 ‘내용’은 삭제되고 이론의 ‘영역’만이 남아서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이론이 한 영역으로만 분류된 것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비판이론이나 페미니즘 이론은 구성적 차원으로 분류되었으나 비판이론이나 페미니즘 이론은 규범적 차원과 관련하여서도 논의할 수 있으며, 체제 이론도 구조적 차원과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론을 한 영역으로만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Ⅲ. Cooper 외의 다차원 정책분석틀을 활용한 연구 현황

앞에서 논의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국내에서 Cooper 외(2014)의 다차원 정책분석틀을 활용한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Cooper 외(2014)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한 연구는 2006년 양성관의 연구를 시작으로 2023년 8월까지 약 86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2010년 8편, 2011년~2015년 18편, 2016년~2020년 31편, 2021년~2023년 29편이 발표되었고, 2022년에만 17편이 발표되어 최근까지도 교육정책 분석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국내 교육정책과 관련된 논문이 69편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중국, 일본 등)의 교육정책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9편 있었으나 모두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작성한 것이다. 이밖에 교육정책이 아닌 일반행정 정책 분야에서도 Cooper 외(2014)의 다차원 정책분석틀을 활용한 연구가 8편 수행되었다.

국내 교육정책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그 주제에 따라 1) 유아교육 및 보육, 2) 초·중등교육, 3) 고등교육, 4) 교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초·중등교육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8편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대학, 교사, 유아교육 및 보육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교육정책의 방향이 초·중등교육 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Cooper 외(2014)의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의 이론을 직접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론 자체를 탐색하는 연구(정훈, 2010)와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을 탐색하는 연구(김제현, 2020)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Cooper 외(2014)의 다차원 정책분석틀을 활용한 연구들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윤리와 사회정의에 대한 간과

윤리와 사회정의는 교육정책 기저에 깔린 정책의 목적이자, 교육정책이 공유해야 할 가치에 대한 기준이다. 이에 Cooper 외(2014)는 윤리와 사회정의를 교육정책의 중핵가치로 설정하고, 모든 교육정책이 윤리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연구 중 4차원 분석을 통해 윤리와 사회정의를 분석 및 정의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차원 정책분석틀 이론 소개에서만 언급하거나 이론 소개에서조차 언급하지 않는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윤리와 사회정의를 연구 결과에서 별도로 분석한 연구는 김상철(2018)의 연구가 유일했으며, 정책의 윤리와 사회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윤리와 사회정의’ 자체로 설정하거나 해당 연구가 윤리와 사회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연구도 있었다.

교육정책의 윤리와 사회정의는 정책의 방향을 제공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김제현(2020)에 따르면 윤리와 사회정의의 포괄성과 추상성 및 4차원 모형에서의 4차원의 강조 등으로 인해 교육정책 분석에서 가치지향적인 윤리와 사회정의를 간과되어 왔다. 특히 이것과 규범적 차원과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

으나, 규범적 차원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가치와 정책신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윤리와 사회정의는 가치와 신념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정책철학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차원보다 정책에서의 핵심 축으로 작용한다(김제현, 2020).

2. 각 차원의 서술 방식

Cooper 외(2014)의 정책분석틀은 4가지 차원의 소개만큼이나 해당 차원의 근간이 되는 7가지 이론에 대해 비중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논문에서는 김상철(2018)의 연구만이 4가지 차원에서 각각의 이론을 통해 정책을 분석하였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각 차원의 이론들에 집중하지 않은 채 4가지 차원의 특징을 바탕으로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는 Cooper 외(2014)가 저서에서 이론 적용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해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김제현, 2020).

이처럼 명확한 이론이 적용되지 않은 까닭에 연구자마다 각 차원에 대한 분석도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많은 연구자들이 기술적 차원의 분석에서 구조적 차원이나 구성적 차원의 요소를 중첩 및 혼재하여 서술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기술적 차원은 체제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획, 실제, 집행 및 평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 차원이지만 정책의 집행과정 분석에 있어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에 집중하게 된다면 구조적 차원과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정책의 특성에 맞추어 차원을 변형한 연구도 존재했다. 전문가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장의 역할에 대해 탐색한 이경호(2011)의 연구에서는 구조적 차원을 물리적 차원으로, 구성적 차원을 문화적 차원으로 변형하였다. 차원 변형의 배경으로 학교 현장에 국한되어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이후 발표한 논문에서는 앞서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차원이 아닌 Cooper 외(2014)가 제시한 분석틀을 활용해 분석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교육자치제의 변동과정을 연구한 조홍순(2015)의 연구는 구조적 차원을 제도적 차원으로, 구성적 차원을 정치적 차원으로 변형하였으나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解慧(2021), 박경순(2017; 2022)

등의 연구에서는 특정 차원을 누락하기도 하였다.

반면, Cooper 외(2014)가 사용하지 않은 이론을 차원 분석에 활용한 연구도 존재한다. 마이스터고 정책을 분석한 신현석·정주영(2008)의 연구와 자유학기제 정책을 분석한 박균열·주영효·고영종(2014)의 연구에서는 Hall & Hord의 12가지 개혁 원리를 적용해 기술적 차원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는 다차원 정책분석틀 활용에 있어 연구자들의 해석의 폭이 넓어 새로운 이론과도 쉽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넓은 해석의 폭으로 인해 각 차원의 서술 방식은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하위요인 추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 해석에 의해 차원별 하위요인을 추출하고 있었다.

3. 다양한 연구방법 활용

설문, IPA 분석 등의 양적연구 방법과 면담, 인터뷰 등의 질적연구 방법을 혼합하여 진행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혼합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하위요인을 추출한 후, 추가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하위요인의 설명력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분석한 이슬아·정제영(2022)의 연구와 같이 다양한 혼합 연구방법이 활용되고 한다. 이처럼 정책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설명력을 높여야 하며, 충분한 선행연구 자료가 확보된다면 기존연구에서 진행된 면담, 설문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분석의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 새로운 경향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기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던 정책 분야의 경우 정책자체에 대한 분석에서 나아가 2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학습공동체 정책을 통한 교장의 역할 탐색(이경호, 2011),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개발 방안(이경호, 2019), 학교수준 교육분권을 위한 학교자치 진단(이경호, 2022), 갈등 사례를 둘러싼 현황 분석틀 활용(박경순, 2023) 등이 있다.

4. 정책이 아닌 대상 분석 및 최근에 도입된 정책 분석에 활용

Cooper 외(2014)는 그의 책에서 자신의 다차원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미국의 몇몇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고 주정부가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주마다 교육 시스템이 다르다. 따라서 미국에서 ‘정책’이라고 할 때는 거의 모든 주에 적용될 만큼 범주가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Cooper 외가 자신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한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거버넌스, 교육과정, 책무성, 교원 인사 정책, 교육 재정 등 매우 범주가 넓고 큰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교육부 주도로 교육 정책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서인지 많은 연구들이 정책으로 규정짓기 어려운 대상을 분석한 경우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교육멘토링 프로그램(이상용, 2012), 대학-단위학교 협력 프로그램(양성관, 2006) 등과 같이 정책이 아닌 미시적인 프로그램을 분석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정책 분석(이윤희, 김은영, 2020)과 같이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단위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형태인 경우가 있었다. Cooper 외(2014)의 정책분석틀은 다양한 차원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단위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분석하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틀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대표할 만한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정책분석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수석교사제,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Cooper 외(2014)의 다차원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이 Cooper 외(2014)의 다차원 정책분석틀을 활용한 이유로는 4가지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의 이면을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장 크게 들고 있다. 총 66편의 국내 교육정책 분석 논문 중 20편이 넘는 논문들이 발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입된 교육정책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러한 논문들은 다차원 정책분석틀에서 주로 기술적 차원을 중심으로 최근 도입된 정책의 추진 과정을 드러내면서 그 이면에 숨은 구조적, 구성적 차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술적 차원은 정책의 추진 과정 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등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즉, Cooper 외(2014)는 기술적 차원에서의 정책집행과 평가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책의 역사가 짧은 경우 정책 집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평가에 있어서도 한계를 지닐 수 있다.

5. 정책의 변동과정 조망

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정책의 의제설정 및 집행과정, 나아가 평가를 함께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 Cooper 외(2014)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이 가진 유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이론과 다차원적인 관점으로 복잡한 교육 정책을 분석하여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에(주영호, 김상철, 2017), 다차원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변화해가는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이기원(2014)의 연구는 대안교육의 정책적 흐름을 고찰하여 오늘날의 대안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송미진·정대영(2015)의 연구는 특수교육정책이 제1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이어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남미영·정제영(2018)의 연구는 90년대 이후 이어져 온 양성 평등정책이 정책화된 2015년의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교육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슬아·정제영(2022)의 연구는 서울형혁신학교를 3기로 나누어 정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서순영·이기성(2022)의 연구는 5.31 교육개혁안부터 이어져 온 평생 학습계좌제의 정책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유아무상 교육·보육정책(2014) 특수교육(2015) 누리과정(2017),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2018), 서울형혁신교육지구(2021) 등 시기별/단계별 흐름을 조망하는 연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Cooper 외(2014)의 정책분석틀이 이러한 변화과정 검토에 있어 다양한 흐름을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하여 살펴보기에 적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학기제나 수석교사제와 같이 도입 이후 시간이 흐른 정책들은 같은 주제일지라도 기존 연구가 정책의 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했다면 후속 연구는 정책 집행과정으로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최근 국내 교육정책 분석에서 이론적 분석틀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Cooper 외의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틀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국내 교육정책 분석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Cooper 외의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틀은 그가 현대 주요 이론이라고 제시한 일곱 개의 이론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나의 이론을 한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하나의 이론이 여러 영역에 속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이론을 한 영역으로 분류한 것 역시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분한 4차원 분석틀은 교육 정책 분석에 있어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도 종합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향후 이를 활용하여 교육 정책을 분석할 시 고려해야 할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자들은 연구 대상이 되는 교육정책을 분석할 때 4차원의 각 영역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네 개의 차원이 충분히 분석되지 않는다면 굳이 다차원 정책분석틀을 활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적 차원은 정책의 도입 과정 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문헌 분석 외에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성적 차원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을 분석할 때 문헌 분석만 하기보다는 관련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다든지 기술적 차원에서 정책에 대해 평가할 때 정책 평가 분석을 실시한다든지 등 각 차원의 내용이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방법론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정책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Cooper 외의 다차원 정책분석에서 강조하는 윤리와 사회정의가 과연 한국 교육 정책에서는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비록 Cooper외에서는 그것을 다소 모호하게 제시했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는 한국 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현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끈기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를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가 궁극적으로 한국 교육 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상철. (2018). 한국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pp 166-214). 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제현. (2020). 다차원 정책분석모형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방교육경영, 23(3), 27-50.
- 김태은. (2015).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 경향과 비판적 논의. 한국행정학보, 49(4), 57-96.
- 김현준. (2009). 외국정책분석이론의 한국교육정책 적용에 대한 비판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6(2), 69-91.
- 남미영, 정제영. (2018).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 분석: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5(3), 53-75.
- 데이비드 R. 디킨스, 안드레아 폰타나 편(1996).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논쟁. 김시완 옮김. 현대미학사.
- 마이클 애플. (2023). 이데올로기와 커리큘럼. 박부권 옮김. 도서출판 한울림.
- 박경순. (2017). 물 관리 행정체계의 변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다차원적 분석모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박경순. (2022). 통합물관리 관점의 한국형 유역거버넌스,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공유자원 디자인 원리와 다차원 분석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11), 266-282.
- 박경순. (2023).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갈등의 핵심요소와 Cooper et al.(2004)의 다차원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8), 235-251.
- 서순영, 이기성. (2022). 평생학습계좌제 정책분석: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Andragogy Today, 25(4), 103-135.
- 송미진, 정대영. (2015). 다차원 모형에 입각한 한국 특수교육정책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0(3), 269-290.

- 신현석, 정주영. (2009). 전문계 직업교육의 대안으로서 마이스티고 정책의 방향과 과제. *직업교육연구*, 28(4), 157-182.
- 양성관. (2006). 단위학교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대학 단위학교 협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방교육경영*, 11, 117-142.
- 이경호. (2011). 전문가학습공동체 정책을 통한 교장의 역할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9(3), 195-221.
- 이경호. (2019).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개발 방안. *교육정치학연구*, 26(1), 111-132.
- 이경호. (2022). 학교수준 교육분권을 위한 학교자치 진단 및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40(1), 115-140.
- 이기원. (2014).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한 대안교육 정책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상용. (2012).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한 대학생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요인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4(3), 436-445.
- 이슬아, 정제영. (2022). 서울형혁신학교의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활용하여. *교육행정학연구*, 40(5), 157-193.
- 이윤희, 김은영. (2020).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정책 분석. *한국교육*, 47(4), 5-34.
- 정훈. (2010). Cooper 등의 교육정책분석 이론 및 모형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4(4), 147-164.
- 조홍순. (2015). 교육자치제 변동의 4차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28(2), 27-60.
- 주영효, 김상철. (2017). 학생부종합전형 정책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35(1), 141-168.
- 解慧. (2021). 한국과 중국 교사 자격제도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Cooper, B., Fusarelli, L. D., Randall, E. V. 가신현, 김병모, 박종필, 양성관, 엄준용, 이준희 공역. (2014). *좋은 정책 좋은 학교: 이론과 적용*. 아카데미프레스.
- Kivunja, C.(2018). Distinguishing between Theory, Theoretical Framework, and Conceptual Framework: A Systematic Review of Lessons from the Field.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6), 44-53.
- Sutton, R. & Staw, B. M.(1995). What Theory is No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0(3), 371-384.

Tamene, E.(2018). Theorizing Conceptual Framework. 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2), 50-56.

Varpio, L., Paradis, E., Uijtdehaage, S., & Young, M. (The Distinctions Between Theory, Theoretical Framework, and Conceptual Framework. Academic Medicine, 95(7), 989-994.

자유주제 발표 세션Ⅳ

교육행정학의 가추기반 이론발달 탐구: 관련 쟁점과 실천 방안

박 선 형(동국대학교 교수)

1. 서론

정교한 이론체계 확립과 이를 통한 당면 현실 문제에 대한 체계적 진단 및 효과적인 실천 해결력 제공 여부는 개별 학문 분야의 사회적 명성과 경쟁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찍이 Kurt Lewin(1943: 118)은 “좋은 이론만큼 실용적인 것은 없다(there is nothing as practical as a good theory)” 라는 학문공동체 내에서 자주 회자되는 명언을 남긴 바 있다. 실제로는 이론을 통해 실천적으로 개선되며, 이론은 실제 현장 적용과정을 통해 그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향상된다. 따라서 제반 학문 분야는 소속 학회 결성·운영, 주제공유·집단토론을 위한 학술대회와 각종 포럼 개최, 학습공동체 형성(Special Interest Group), 개별 논문 투고, 학회지 출간 등 전문 연구자의 자기 연찬 노력과 구성 집단의 협력적 활동을 통해 ‘좋은 이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교육에 관한, 교육을 위한’ 모든 것을 다루는 교육행정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구 교육행정학계의 경우, 물리학과 같은 경성과학의 성격을 표방하고자 일단의 미국학자들이 1950년대부터 행동과학·논리실증주의 기반의 ‘이론화 운동(The Theory Movement)’¹⁾을 주도하여 전통 교육행정학의 학문성격과

1) 해당 용어는 원어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이론운동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론화(theorizing, theorization)는 완성된 결과물로서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전까지의 준비단계와 탐구과정을 총칭하는 용어로 간주된다. The Theory Movement는 이론화 논의를 생략한 채 논리실증주의 철학에 근거하여 이론의 전형을 가설연역 체제로 단적으로 규정하면서 교육행정학에 대한 행동과학적 접근을 활성화시켰던 결정적인 역사적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이를 고려해볼 때 교육행정학 입문서 등에서 해당 용어를 이론구성과 발달 준비과정인 이론화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은 오역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Swedberg(2014)는 이론화와 이론의 차이에 대한 상세한 차별적 논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론체계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적·비판적 흐름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캐나다·호주 등의 영연방국가 학자들과 유럽철학에 관심을 표명한 일부 미국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Bates, 1980; Evers & Lakomski, 1991; Foster, 1986; Greenfield, 1975; Ribbins, 1993). 이들은 이론화운동의 핵심 교의(예: 가설연역체제, 사실과 가치의 이원적 구분 등)를 적극 비판하면서 다양한 대안적 시각(주관주의,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자연주의 등)을 조직과학과 지도성 영역 등에서 다양하게 전개·발전시킨 바 있다. 1980년대의 Griffiths-Greenfield-Willower의 논쟁은 이를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학술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²⁾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도 교육행정학 학문토대 구축을 위한 이론발달 기제의 다양성 탐구와 연구방법론 활성화 방향을 포괄적으로 구명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있어 왔다(박선형, 2006, 2010, 2012, 2023; 변기용, 2018; 신현석, 2009). 그러나 치열하게 관련 논쟁을 진행하였던 서구의 학계와 비교하여 볼 때 논의의 ‘내적 열기와 양적 지속’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였다. 특히나 국내 학계의 교육행정학 이론발달에 대한 주된 담론은 일부 소수 학자들에 국한되어 진행되었으며, 이론화 과정 전반에 걸친 관련 쟁점 분석과 대안 도출 보다는 경쟁 이론의 과학철학 토대 확인과 활용되는 방법론 측면에 치우친 경향성이 있었다(박선형, 2023; 변기용 외, 2022; 신현석 외, 2022).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론발달 과정에 대한 심층적 탐구와 적합한 연구실행을 위한 이론 참조기제 정립 및 관련 연구결과의 체계적 집적은 모든 학문공동체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개별 학문의 상대적 위상과 연구수행 성과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박선형, 2022: 31).

학문공동체 내의 이론구성·발달은 개별 발견에 근거한 창의성 발휘와 과학적 논리·방법론적 엄밀성에 근거한 논리 정당화가 동시에 활용될 때 가능하다. 이는 발견의 맥락(the context of discovery)과 정당화의 맥락(the context of justification)의 교차적 활용을 의미한다.³⁾ 즉, 교육행정학 분야의 이론화는 개별 학자 수준에서 독창적 아이디어 생성과 흥미있는 발견이 체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선형(1999, 2002, 2012) 참조

3) 해당 두 용어는 1930년대 경험주의 한계(특히 귀납법)를 극복하기 위하여 Hans Reichenbach가 제시한 용어이다. 발견의 맥락은 사고 과정이 주관적으로 수행되는 형태를, 정당화의 맥락은 사고 과정이 타인에게 전달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Karl Popper는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1959)”에서 과학은 오로지 정당화의 맥락에 의해서만 지지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사고과정과 성찰적 환류가 연구 집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행될 때에 한해서 구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론화의 첫 출발점인 아이디어 착상과 새로운 발견은 개별 학자의 비인지적 요인(상상력, 직관, 영감 등)과 환경적 요인(예: 우연)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러한 주관적 요인들은 이론구성·발달의 엄밀성과 검증(또는 반증) 가능성이라는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전적으로 배척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행정학의 실증주의 전통과 행동과학적 접근을 확립한 ‘이론화운동’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이론 정당화를 위한 사고방식과 추론양식은 (가설)연역법과 귀납법에 의해서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전제에서 논리적 연역을 통해 결론에 도달함을 강조한다. 연역법에서 연구수행을 안내하기 위한 출발점은 항상 이론이며, 가설은 반드시 기존 이론에 근거하여 도출된다. 가설 확증(또는 반증) 기반의 인과관계 구명을 통한 일반적 법칙 정립 즉 설명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양적 접근이 해당 전통에 속한다. 이에 반해 후자는 개별 사례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경험적 현상에 대한 지식 획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귀납법에서 이론은 개별 자료에 대한 관찰과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로 나타난다. 귀납적 성격의 질적 접근은 관심 현상의 맥락적 상황과 그 속에서 발행하는 다층적 의미에 대한 기술적 해석을 추구한다.

최근 들어 경영과학과 조직과학 등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과학철학, 인지과학, 컴퓨터과학, 인공지능, 의학 등 제반 학문 분야를 망라하여 가설 생성과 논증 출발 기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추론 방식인 (가설)연역법과 귀납법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가추(abduction)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Behfar & Okhuysen, 2018; Janiszewski & van Osselaer, 2021; Magani, 2022; Sætre & Van de Ven, 2021). 전통적 연역·귀납 논리체계에서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여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관련 가설을 생성하고, 해당 가설의 참됨 구명을 통하여 놀라운 현상에 대한 진위를 밝히려는 노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과제로 남는다. 연역적 연구는 항상 기존 이론에서 출발하고 귀납적 연구는 전적으로 관찰 현상 관련 자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 접근 방식은 좋은 이론을 궁극적으로 생성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론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경우(연역적 접근)는 최종적으로 기존 이론 확대 차원에서만 머물게 되며, 개

별 관찰 사실에 근거한 탐구(귀납적 접근)는 결국 참조기체로서의 이론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론의 포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연역과 귀납 추론방식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면서 두 가지 사고 체계를 연계적으로 결합하는 제 3의 논리 추론방식인 가추를 양적·질적 연구 및 혼합방법연구 수행 과정 등에 적용하면서 가용할 수 있는 연구 기법과 실제 활용 절차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저작물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매우 희소한 상황이다. 특히, 교육행정학 이론발달에 대한 가추 논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교육행정학 이론발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역사적 사건인 ‘이론화운동’의 핵심 내용과 쟁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가추 기반 연구수행의 성공적 실행을 총괄하는 연구방법론 관련 논점(현상과 자료의 차별적 구분, 가추 기반 연구방법철학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화운동과 가설연역체제 및 비판점

1. 이론화운동과 논리실증주의 및 행정원리들

실증주의 교육행정이론이 체계적으로 성립된 역사적 계기는 1957년 Chicago 대학의 미중서부 행정센터(the Midwest Administration Center)에서 개최된 교육행정이론 세미나다. 기능주의 사회학의 거두인 Parsons를 비롯하여 교육행정학의 행동과학 접근을 확립한 1세대 학자인 Hemphill, Griffiths, Getzels, Campbell, Halpin 등이 당시의 학술모임에 참석하였다. 이들은 고전 조직이론인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관료제 등과는 차별화되는 자연과학 연구 수준의 엄정한 이론체계를 확립하여 교육행정학의 지식기반을 강화하려는 학문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신운동(the New Movement)’ 또는 ‘이론화운동(the Theory Movement)’으로 명명되고 있다. 핵심 주장은 크게 ‘가설연역 연구, 보편개념으로서의 행정, 교육체제에 대한 행동과학 접근, 조작주의, 윤리적 가치 주장 배척’으로 요약된다(Culbertson, 1983: 15; Evers and Lakomski, 2000: 4; Griffiths, 1985: 3). 당시 시대정신이었던 논리실증주의⁴⁾는 이론화운동의 주요 논점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4) 논리실증주의는 당대의 유명 철학자였던 M. Schlick, R. Carnap, O. Neurath, H. Feigl, H. Reichenbach 등이 결성한 비엔나 씨클이 1920년대와 1930년대 초에 발달시킨 철학

조직심리학자인 Herbert Simon은 1945년 행정행태론(Administrative Behavior)을 출간하여 논리실증주의에 기반의 행동과학 연구토대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⁵⁾ 동 저서는 교육행정학 이론발달을 위한 고전적 참조기제로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Simon은 행정의 핵심을 의사결정과정(decision-making processes)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인간은 한정된 사고 능력 즉,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으로 인하여 무결점의 완벽한 의사결정을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하였다. 따라서 Simon은 제한된 합리성 내에서의 ‘만족스러운’ 의사결정을 성취하는 것이 행정조직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는 무엇보다도 의사결정과정의 사실 영역과 가치 측면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오로지 전자만을 충실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치적 주장은 경험적 근거에 기초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기에 가치 영역은 연구대상에서 전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imon, 1976: 45-46). 그는 행정과학과 의사결정 영역이 보다 학문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논리실증주의를 ‘출발점’으로 설정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Simon(1976: 37)은 실증주의 기반의 행정이론의 최우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명기한 바 있다.

행정이론의 첫 번째 과업은 이론 적합성에 근거하여 행정적 상황들에 관한 기술적 묘사를 허용하는 일련의 개념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들 개념들은 과학적으로 유용해야 하고 반드시 조작적으로 작동 가능해야 한다. 즉, 개념의 의미들은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들과 상황들에 대응해야만 한다.

관찰 가능한 사실들의 체계적 분석을 최우선시하고 가치 영역을 배제함으

사상이다. 논리실증주의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의미의 검증이론(the verification theory of meaning)’이다. 이 이론이 뜻하는 바는 수학이나 논리학처럼 분석적이거나 관찰과 같은 감각경험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검증될 때에 한해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적 근거에 의하여 검증할 수 없는 형이상학, 윤리적 문제나 미적 관점 등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논리실증주의 기반의 전통적 교육행정학 이론은 학문 관심과 연구 대상에서 경험적 검증이 불가능한 가치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사실 문제 구명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 5) Simon은 이 저서로 인하여 197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여받았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의사결정과 인지과학의 연계성 구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인공지능 연구에 매진하여 초기 인공지능 연구의 선구자로 자리 매김하였다.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의사결정의 심리적 토대를 강조한 Simon의 초창기 학문적 업적은 1990년대 이후 행동경제학 출현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로써 ‘행정이론의 과학성’을 제고하려 하였던 Simon의 학문적 시도는 교육조직의 효과성 제고와 효율성 향상에 전념하던 서구(특히 미국) 교육행정학 1세대 학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대표적인 교육행정학자는 Simon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Daniel Griffiths를 들 수 있다.

Griffiths(1957)는 이론화운동을 주도했던 당시에 작성한 논문(Towards a theory of administrative behavior)에서 이론은 경험적 수단들에 의하여 전적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사실적인 내용들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Simon의 논리실증주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는 이론은 사실의 논리적 조직체로서 귀납적이고 연역적 성격을 가지며, 관찰을 출발점으로 이론형성이 시작되며 사실이 이론의 기초이자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론은 전적으로 경험적 수단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타당화되기 때문에 오로지 이론의 활용은 증명 가능한 사실적 내용에 국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행정행위의 ‘당위성(oughtness)’은 행정가들이 준수해야 할 일련의 가치에서 연유하는데, 과학은 그 자체로 윤리적 중립성을 표방하기 때문에 만약 과학이 사회의 윤리적 개념들과 연계된다면 (행정)과학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파하였다(Griffiths, 1957: 366). 이러한 맥락에서 Griffiths(1964: 98)는 비엔나 씨클의 논리실증주의자들, 특히 Herbert Feigl이 제시한 이론적 관점을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Feigl에 따르면 이론은 수학적이면서 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보다 큰 일련의 경험적 법칙들이 도출될 수 있는 전제들의 집합으로 간주된다. 이론 연구방법은 이미 실증된 법칙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론에서 연역적으로 도출한 법칙을 가설로 삼아 이를 다시 경험적·귀납적으로 검증하려는 가설연역적 접근(Hypothetico deductive approaches)으로 규정된다.

이론실행 과정을 가설연역 체제로 정의하면서 행동과학 기반의 이론화운동을 주도한 학자들은 당시 유행했던 과학철학 사조인 논리실증주의가 교육행정 지식기반의 견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절차를 제공하였다고 믿었다. 특히, 기존의 일화적 증거나 행정가의 ‘통속적 지혜’에 의존하던 기존 교육행정학 연구를 탈피하여 이론의 체계적 과학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예컨대, 국내 교육행정학 관련 대다수 저서가 지금까지도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Mort의 ‘교육행정 원리’는 경험적 법칙을 결여한 대표적인 상식적 신념 사례로 간주되었다. Mort는 법률 구조, 운영 유형, 재량 행위 3개 측면에서 학교행정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식적 판단의

원리’ 14개와 ‘균형잡힌 판단 원리’ 및 ‘경험적 지식의 원리’로 구성된 총 16가지 교육행정 원리를 기술한 바 있다.⁶⁾ Mort의 관점에서 보면, ‘균형잡힌 판단(balanced judgement) 원리’는 각 원리들 간의 상호 충돌과 내적 갈등 조율 기제로 작동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행정적 문제들은 다양한 원리들의 요구들에 관한 하나의 균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만 한다. 가끔은 하나의 문제가 단일한 기본 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단일한 원리가 논리적 결론을 이끈다면 결과는 종종 모호해진다. 판단은 단일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들의 결단적 해결(a resolution)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판단을 힘들의 결단적 해결로 간주하는 사람은 타협으로 인한 좌절감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이는 타협이 아니라 균형잡힌 판단이다(Mort, 1946, p. 262).

Simon(1975: Ch. 2)과 Griffiths(1957)는 초창기 저술활동을 통하여 Mort류의 이론형성에 관한 상식 수준의 비과학적 접근(행정학의 경우 Gulick & Urwick의 상호 상충적인 행정원리들)의 내용적 한계점과 구조적 취약점을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특히, Griffiths는 이론화운동 이전에 출간된 대부분의 교육행정학 저작물들이 학교행정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원리들’을 조직운영의 당위적 안내 지침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왔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각 원리들의 내적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균형잡힌 판단을 포괄하는 Mort의 원리론 자체는 개념 토대의 불명료성과 정당화 근거 부족으로 인해 내생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부분의 원리들은 내적 일관성을 결여한 상식적 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제반 원리들이 ‘관찰가능’ 할 때 즉, 증명 가능한 증거기반을 확보할 때에 한해서 명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Griffiths, 1957: 371-372).

6) Mort는 상식적 판단의 원리로서 3개 집단(인도적·심사숙고적·속도적 집단)과 세부 14개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인도적(Humanitarian) 측면의 원리로는 작용적 민주주의(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 보장), 정치적 민주주의(통제력 행사로 영향 받는 이의 관여), 공정, 기회균등 4가지를, 신중한 사고(Prudential) 측면의 원리로는 경제성, 제약과 균형, 자유와 방종, 권위와 책임, 단순성, 충성, 관성 7가지를, 속도(Tempo) 측면의 원리로는 적응성(adaptability), 신축성(Flexibility), 안전성(Stability) 3가지를 기술하였다. 이상의 14개 상식의 원리는 단독으로는 실제로 작용하기 보다는 반드시 균형잡힌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균형잡힌 판단’ 원리를 15번째 원리로 추가하였다. 또한 상식의 원리와 균형잡힌 판단의 원리 사이에는 추상적 원리를 벗어나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해야만 각 원리의 적용을 더욱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경험적 지식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하여 이를 추가해서 총 16개 원리를 제시하였다.

Griffiths(1983: 203)는 논리실증주의는 당시 거부할 수 없는 과학적 이념 (scientific ideology)이었으며, 자신의 초창기 학문 연구이력을 자연과학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실증주의 기반의 가설연역적 접근에 대한 열렬한 수용 의사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젊었을 때 나는 과학과 수학분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논리실증주의에 매력을 느꼈다. 논리실증주의 접근은 교육행정학 분야를 구성하고 있었던 자기 봉사적 성격의 품행 추천서, Mort와 Sears와 같은 유사 이론들, 명백한 헛소리에 대한 적절한 해독제였다(Griffiths, 1985: 49).

요컨대, 당위론적 처방 성격을 표방하면서 상식 수준에서 획득된 일반인의 문제해결 경험을 공리화하고자 하였던 ‘행정원리들’은 미국 교육행정학의 학문담론에서 철저히 배격되었으며 그 결과, 이론화 운동 이후에 출간된 미국 교육행정학의 주요 저서에서 Mort의 ‘행정원리들’에 대한 논의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국내 교육행정학 대표 입문서들은 이를 매우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후속학문 세대가 1세대 학자들(백현기, 1958; 김종철, 1970)의 저술활동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에 기인한다.

많은 사람이 교육행정을 연구하고 있으나, 그 교육행정을 이행해가는 근본원리에 관하여 말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 교육행정의 기본원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 현대가 요구하는 원만한 행정상의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단 한사람 모-트(Mort) 박사가 여기 관한 전문적 연구를 하여 『교육행정 원리』라는 저서를 내고 있다(백현기, 1958: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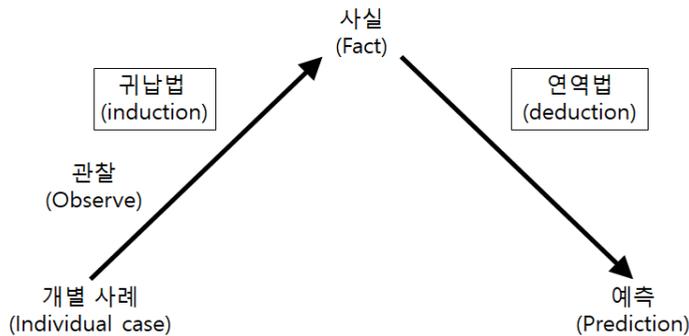
실천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행정에 관하여 규범이 되는 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미국의 교육행정학자 모오트(Paul R. Mort) 교수의 저서가 가장 유명하다. 그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교육행정의 운영면에서 본 기본원리를 상세하게 논하였다(김종철, 1970: 45)

교육행정의 과학화와 가설연역 접근에 기초한 실증연구를 확립하면서 행정개념의 일반화를 목표로 하였던 이론화운동 주창자들은 학문공동체 내에서 이론적 엄정성을 결여한 ‘행정원리들’의 급격한 퇴조를 적극 촉발하였다.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대변되는 현 시대 상황에 있어 ‘보편적 원리’에 대한 지속적 탐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도 마땅치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론화운동은 교육행정의 과학적 토대 강화라는 시대적 관점에서는 일견 타당한 접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관찰 가능한 사실에만 근거하여 이론기반 가설의 경험적 검증 가능성을 편향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교육행정학의 실증과학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던 이론화운동은 1970년대 후반부터 후기실증주의의 핵심 교의(관찰의 이론의존성, 이론의 과소결정성 등)에 근거한 대안적 교육행정 이론체계(주관주의, 비판주의 등)에 의해 거센 도전을 받게 된다.

2. 가설연역적 방법과 비판점

가설연역적 방법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과학적 추론방식으로서 가설검증을 통한 예측 설명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실증주의 기반의 행동과학적 접근과 양적 연구설계(예: 전통 통계학의 유의성 검증 활용)는 반드시 이에 기초해야 한다. 가설연역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납과 연역의 내용적 특징을 개괄할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두 가지 사고방식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그림 1] 귀납과 연역의 차이

※ 출처: Chalmers(1982: 6)

과학적 사고에서 귀납은 반복된 관찰에 근거하여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잘 정립된 이론(사실과 법칙)을 강화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따라서 귀납법은 법칙 규명에 우선적 관심을 가지는 근대과학의 기본적인

논리구조로 작동한다. 귀납주의의 원리는 ‘다양한 조건아래서 많은 개별적 사례 A가 관찰되었고, 관찰된 A가 예외 없이 모두 B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A는 B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Chalmers, 1982: 13)라는 논리구조에 입각한다. 예컨대, 개별 사례로서의 백조를 다양한 상황 조건에서 수없이 많이 관찰하였으나 모든 백조가 희었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모든 백조의 색깔은 희다’ 라는 일반적인 사실적 법칙이 도출된다. 따라서 귀납은 개별 사례들 총합의 함의 결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편적 규칙을 추론하여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에 반하여 연역적 사고는 모든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해당 전제의 틀 안에서 도출되는 구조를 가진다. 즉, 결론은 이미 전제 자체에 암묵적 형식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따라서 연역법은 그 자체로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논리구조다. 그러나 전제로부터 결론을 반복 도출하는 논리구조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지식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삼단논증 형식의 예제에 근거하여 귀납법과 연역법을 구체적으로 상호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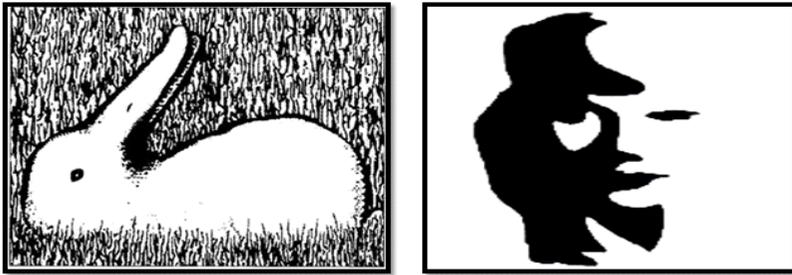
<표 1> 귀납과 연역의 삼단논증 사례

	귀납			연역	
사례	■이 콩들은 이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 여자는 타자를 많이 쳤다	법칙 (규칙)	■이 주머니에서 나온 콩은 모두 하얗다	■타자를 많이 치면 소매가 반들반들해진다
결과	■이 콩들은 하얗다	■그 여자의 소매가 반들반들해졌다	사례	■이 콩들은 이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 여자는 타자를 많이 쳤다
법칙 (규칙)	■이 주머니에서 나온 콩은 모두 하얗다	■타자를 많이 치면 소매가 반들반들해진다	결과	■이 콩들은 하얗다	■그 여자의 소매가 반들반들해졌다

※ 출처: Eco & Sebeok(1984), 김주환·한은경 역(2015: 286-287,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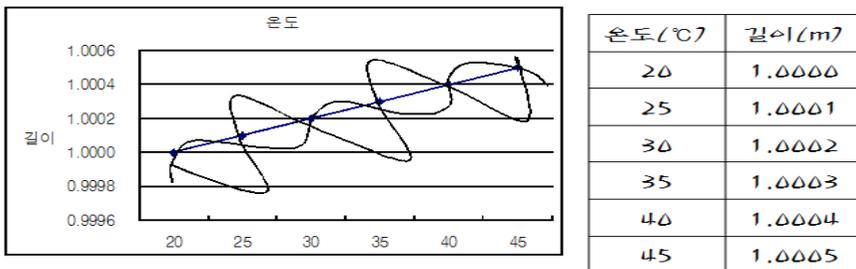
관찰적 증거기반의 개별 사실에 근거하여 법칙(이론)의 상향적 도출을 목표로 하였던 귀납법은 학문공동체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추론방식으로서 일반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접근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논리)실증주의의 급격한 쇠퇴를 초래하였던 후기실증주의의 세 가지 핵심 논제는 귀납법의 정당성을 크게 위축시켰다. 첫 번째 논제는 관찰의 이론의존성이

다. 인간의 사물 관찰은 주관적 신념과 개인 해석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개별적 해석은 천차만별로 가능하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관찰의 이론의존성은 각기 다른 해석(토끼 vs 오리, 색소폰 연주자 vs 사람 얼굴)을 유발하여 관찰 증거의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객관적 관찰에 의해 일반법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던 귀납법은 출발점 자체가 무력화되는 한계점에 노출된다. 따라서 관찰 경험에 근거한 법칙기반의 이론 성립은 난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림 2] 관찰의 이론의존성

두 번째 핵심적인 후기실증주의 사상은 이론의 과소결정성(경험적 미결정성)이다. 이는 동일한 관찰증거가 여러 상이한 이론들을 동시에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논제는 온도가 쇠막대기에 길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가상 과학실험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온도가 20도일 때 쇠막대기의 길이는 1m인데 온도가 5도씩 상승할 때마다 막대의 길이가 0.0001 미터씩 늘어나는 경우의 양자 간의 관계는 [그림 3]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그림 3] 온도와 막대기 길이의 관계 측정치

그래프에 나타난 쇠막대기 길이와 온도와의 관계는 그래프 상에 관찰·측정된 점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이 중 직선은 A, 상향곡선은 B, 하향곡선은 C라고 명명할 경우 온도와 쇠막대기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선은 측정된 점을 직선으로 통과하는 A선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B나 C선과 같은 무수히 많은 선들이 측정된 자료점(관찰 증거)을 통과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동일한 관찰 증거가 여러 상이한 이론을 동시에 확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많은 경쟁이론들이 관측된 자료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증거에 근거한 실증이론은 경험적 취약성(경험적 미결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귀납법의 한계점을 지적한 후기실증주의 사상은 Karl Popper의 반증주의다. 반증사례는 귀납적 논리의 정당화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위의 예에서 살펴본 ‘모든 백조의 색깔은 희다’ 라는 귀납적 논리와는 다르게 호주에는 까만색의 백조가 실제로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백조의 색깔은 희다’ 라는 보편 법칙은 반박된다. 다시 말해, 개별 사례에 대한 반복적 관찰을 통하여 획득한 일반 법칙(귀납법)은 단 하나라도 반박되는 상충적 사례가 관찰된다면 정당성과 설득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귀납적 논리에 근거한 법칙·이론은 보다 광범위한 개연성의 개념으로 대체되게 된다. 절대적으로 참인 일반적 법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연적으로 참일 수 있는 가설을 근거로 하여 이와 관련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경험 자료들에 의하여 가설이 확증되어 법칙과 이론이 정립되는 가설 연역적 접근이 나타나게 된다. Hempel(1966)은 예측·확증 과정을 거쳐서 가설 주장의 진위성이 확인된 후에 가설의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한다.

<표 2> 가설연역적 접근의 확증 과정과 불확증 과정

확증(confirmation)		불확증(diconfirmation)	
논증	설명	논증	설명
만약 가설 H이면 결과 P임	H는 P를 의미함	만약 가설 H이면 결과 P임	H는 P를 의미함
결과 P임	예측이 발생	결과 P가 아님.	예측이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H는 확증되지만 입증되지 않음.	따라서?	H는 반박되며 확실하게 거짓임.

※ 출처: Schvaneveldt, (2012: 13).

가설연역적 접근에서 불확증 과정은 가설(H)이 거짓임을 결정적으로 입증한다. 이에 반해 확증 과정은 가설의 참됨을 증명하지 않는다(결과 P가 참인 경우 가설 H가 참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후건긍정 오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증과정은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를 확인함으로써 가설에 대한 확신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가설연역적 연구에 따르면 가설적 이론(예: 민주적 지도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은 검증 가능한 경험적 결과(예: 설문지분석을 통한 실증적 자료)의 과정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가설은 가설이 함축하는 관찰증거(예: 민주적 지도성과 직무만족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될 때 확증되거나 가설 반대적 관찰증거가 발견될 때 불확증된다. 따라서 이론은 가설 반대적 증거에 의하여 불확증(disconfirmation)되기보다는 가설 함축적 증거에 의하여 보다 많이 확증(confirmation)될 때에 한해서 그 이론은 다른 이론 보다 더 정당화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연역적 접근은 연구자로 하여금 가설확증 사례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게 함으로써 확증 절차과정의 엄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론화운동의 주요 논점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던 대안적 시각(주관주의, 비판주의 등) 주창자들은 전술된 후기실증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가설연역적 접근을 통한 객관성 달성 실패와 경험증거(empirical adequacy)의 이론미결정으로 인한 이론 선택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전통 교육행정학 이론발달에 도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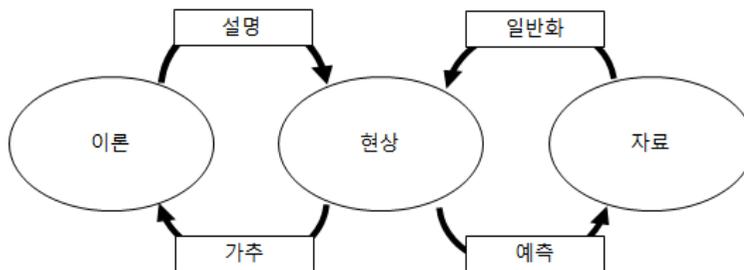
III. 가치기반 이론 발달과 연구 방법

1. 현상과 자료의 특성 및 가치

모든 연구 활동은 연구문제의 체계적 탐구에서부터 시작한다. 연구문제 인식과 발견은 문제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성찰적 고민과 학문적 관심에 의해서 유도된다(현상을 감지하지 못하면 결국 무엇을 설명해야할지 모름). 이는 관심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실천적 자각을 통해 연구수행 아이디어가 착상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구수행 과정에 있어 초보 연구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는 연구문제 형성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는 문제 현상에 대한 성찰적 탐구를 생략한 채 현상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에만 과도하게 몰두하는

‘자료광(data mania)’의 자세이다. 이는 대학원 논문지도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예컨대, 양적 연구 수행에 있어 문제 현상 관련 선행 연구 분석과 이론적 정당화를 생략한 연구가설 양산과 설문조사 단순 실행을 통해 경험증거가 결여된 양적 연구 자료를 산출해내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또한, 질적 연구 수행에 있어서도 문제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결여한 채 현장 구성원에 대한 맹목적 면담과정을 통해 획득한 무의미한 단어들의 조합을 대량 배출해내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체계적인 과학적 탐구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자료가 아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특히, 실재론의 관점에서 과학적 탐구는 문제 현상을 인지·발견하고 문제 현상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인과요인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적 이론기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Haig는 과학이론은 자료가 아닌 현상을 대상으로 설명·예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현상과 자료는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Borsboom et al, 2021: 758-759; Haig & Evers, 2016: 77-78; Haig, 2014: 33-37). 현상은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영속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안정성, 일반성, 반복성, 규칙적 패턴, 경험적 일반화)을 가진다. 현상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자료는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획득되며 특정 조사 상황별로 상이성을 가진다. 따라서 일시적이며 특정 조건적 성격을 반영한다. 자료는 경험적 현상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현상은 경험적 자료 패턴의 강력한 일반화로 간주된다. 과학적 이론은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험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화 과정에서 추론적 가설이 생성되며 이는 가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론과 자료 및 현상 간의 상호 관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현상과 자료의 차이 및 이론생성 과정

※ 출처: Borsboom et al. (2021: 759)

현상과 자료의 특성이 가장 명확한 개별 사례로는 Flynn 효과(전 세계적으로 세대의 진행에 따라 십년마다 3점씩 IQ 점수 증가)와 IQ 점수를 들 수 있다(Haig, 2014: 26). IQ 점수는 일시적 자료로 간주된다. 이에 반해 Flynn 효과는 일반성을 가진 현상으로 정의된다. 규칙적 패턴으로서 안정적·반복적으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Q 점수는 Flynn 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최근 들어 국내 교육행정학계에서 질적 연구 접근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근거이론의 경우, 가설확증에 초점을 두는 가설연역적 접근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자료의 지속적 비교와 자료 포화 상태를 거쳐 문제 현상과 유관한 자료에서 이론을 귀납적으로 생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자료는 현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거이론의 이론 생성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의 본격적 실행은 자료 중심이 아닌 현상 기반으로 재형성될 필요가 있다.

현상 설명을 위한 이론생성 과정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사고 추론 양식은 가추(abduction)다. 해당 용어는 Aristoteles의 *apagōgē*(간접환원법)을 번역하기 위해 활용된 단어다. 일찍이 100여 년 전, 실용주의 창시자인 Charles Sanders Peirce는 논리 추론 양식으로서 가추의 중요성을 최초로 강조한 바 있다. 어원상, 가추는 라틴어 *abducere*에서 도출되었으며, ‘~로부터 이끌다(to lead away from)’를 의미한다. 가추는 문헌상에서 ‘뒤로’를 뜻하는 라틴어 *retro*와 ‘이끌다’를 의미하는 *ducere*에서 유래된 *retroduction*(역행추론)과 동의어로 자주 혼용되는 측면도 있다(Haig, 2012: 10). Peirce는 저술활동에서 가추와 역행추론을 상호 교환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비판적 실재론의 창시자로 간주되는 Roy Bhaskar 역시 양자를 동의어로 간주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단의 비판적 실재론자(예: Danermark, Ekström & Karlsson 2019; Ritz, 2020)는 가추와 역행추론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양자의 특성을 독립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들에 따르면 가추는 현상(X)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이에 반해 역행추론은 현상(X)가 존재하기 위한 속성, 즉 현상 X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에 대한 추론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추(현상 X에 대한 설명적 가설 생성)는 역행추론의 출발점으로 작용하며, 역행추론은 역으로 가추의 진위(생성된 설명적 가설의 전제 조건 구명)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양자 간의 구분은 논리적 개념 관계일 뿐 실제 현실에서는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 애초에 현상 X에 관해 생성된 가설(가추) 자체가 최선의 설명적 정합성을 가진 가설로서 이미 현상 X의 발생 조건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표 9>에서 “여자의 소매가 반들반들해졌다(놀라운 사실)”에 대한 최선의 설명적 가설은 “여자는 타자를 많이 쳤다”라는 진술문이다. 이 예에서 보듯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설명적 가설은 왜 그러한 사실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최선의 추정적인 설명적 기술을 이미 충분히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추 추론은 귀납과 연역에 비해서 추측 가설 생성이라는 추론적 성격으로 인해 학문공동체 내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된 측면이 크다. 가추는 기존 이론에 명료하게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문제 현상을 관찰 경험하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료가 그럴듯하게 들어맞는 경우를 추측할 때 발생한다. 즉, 가설생성의 기초 역할을 수행한다. Peirce는 가추 추론의 논증 양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Haig, 2012: 10).

- 놀라운 사실인 C가 관찰된다.
(The surprising fact, C, is observed).
- 하지만 만약 A가 참이라면 C는 당연한 일이 된다.
(But if A were true, C would be a matter of course).
- 따라서 A가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
(Hence, there is reason to suspect that A is true).

가설연역 접근 섹션에서 활용된 삼단논증 양식으로 가추의 논리구조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가추 삼단논증 사례

가추		
법칙 (규칙)	■ 이 주머니에서 나온 콩은 모두 하얗다.	■ 타자를 많이 치면 소매가 반들 반들해 진다
결과	■ 이 콩들은 하얗다	■ 그 여자의 소매가 반들반들해져 있다.
사례	■ 이 콩들은 이 주머니에서 나왔다.	■ 그 여자는 타자를 많이 쳤다.

※ 출처: 김주환 · 한은경 역(2015: 286-287, 356)

전술한 바와 같이 귀납은 새로운 자료를 수집 활용하여 잘 정립된 이론을 강화하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관찰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주로 문제의 본질과 맥락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관심을 둔다. 반면, 연역은 기존 이론에 기반을 둔 특정 관찰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면서 가설 검증 경험적 증거를 확인한다. 동시에 개념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 검증 가능한 가설 확인, 일반화 가능성 탐색 등을 통해 현상을 예측·통제하는 데 주된 초점을 둔다. 즉, 연역법은 이론 주도의 하향적 논리구조(이론 관련 가설 도출과 가설 변인 검증·불확증 과정을 통한 이론 검증)를, 귀납법은 자료 기반의 상향적 논리구조(개별 자료 관찰과 주제·패턴 확인을 통한 이론 구축)에 기반을 둔다.

Peirce는 귀납과 연역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이론 생성·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창의적인 논증 양식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는 이론 생성은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문제 현상에 관한 설명적 가설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과정 즉, 가추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연역과 귀납 및 가추의 내용적 특징을 상호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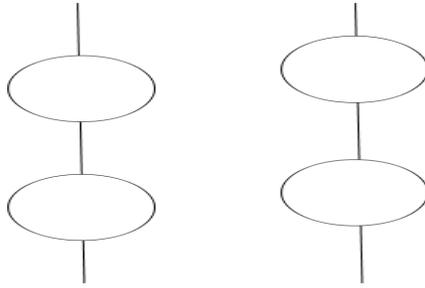
그런데 가추 추론과정에 있어서 관찰된 놀라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생성된 가설이 항상 참일 수만은 없다. 이 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판 중 하나는 가추 추론이 일탈적인 관찰경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든 유형의 자유분방한 가설(wild hypotheses) 생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상상력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한 가설 생성이 무한한 경우, 경쟁적 가설 중에서 최선의 가설을 선택·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제기된 해당 가설은 절대로 옳은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무엇인가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렇다(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를 증명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Lipscomb, 2012: 254)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 대한 전향적 해결을 위해 관련 연구는 경쟁적 가설 사이에서 보다 나은 자격 조건과 설득력을 갖춘 최상의 가설 선별은 모든 관련 정보와 쟁점 및 반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일종의 판별 준거 예컨대, 가설 자체의 “부합성(Fit)”, “그럴듯함(plausibility)”, “적합성(relevance)” 등의 평가적 기준 활용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Tavory & Timmermans, 2014: 131-132). 예컨대, [그림 5]를 설명하기 위한 경쟁적 가설 유형은 어떤 형태로 제시될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그림 5]를 설명하기 위한 경쟁적 가설 유형은 어떤 형태로 제시될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표 4> 연역과 귀납 및 가추 관련 연구법 상호비교

	연역	귀납	가추
배경 철학	■실증주의	■경험주의	■실용주의
논리	■전제가 참일 때 결론도 참이어야 함.	■전제는 검증되지 않는 결론생성에 활용됨.	■제는 검증 가능한 결론생성에 활용됨.
기술적 설명	■일반원칙에서 구체적 특정사례로 이동 ■대전제·소전제가 모두 참이면 결론도 참이어야 하는 삼단논법	■구체적 특정사례에서 일반 원칙으로 이동 ■변수(진실) 간 관계성의 확률적 함수를 찾기 위한 자료(특정 사례)의 통계적 양적 분석 또는 내러티브 질적 분석(진실은 불확실함).	■설명되지 않는 이상 현상(변칙)에서 그럴 듯한 설명으로 이동 ■변칙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설명을 창출하고 평가하는 생성적 과정
목표	■이론 검증(반증 또는 확증)	■이론 생성·구축	■이론 생성·수정(적절한 경우, 기존 이론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이론을 통합)
연구 시작점	■가설	■작동가설	■경험적 수수께끼·이상 현상(모순·상치되는 비정합적인 발견)
연구 접근	■가설에 대한 편견없는 검증 수행	■일반적 속성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자료 규칙성 활용	■잠재적 설명에 관한 추측을 안내하기 위하여 자료 불규칙성 활용
이론 역할	■지시적	■적합성 없음	■안내적(정보제공)
가설·이론발달	■연역적 추론	■자료 분류	■자료기반의 창의적 추측

	연역	귀납	가추
가설 · 이론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적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럴듯함 · 포괄성
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수집은 기존 이론과 관련된 명제 또는 가설평가에 활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수집은 현상탐색과 주제 · 패턴 확인 및 개념적 기제 창출에 활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수집은 현상탐색과 주제 · 패턴을 확인하고, 이들을 개념적 기제 내에 위치시켜서 후속 자료수집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데 활용됨.
지식주장 평가준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제가 타당화되었는가? ■예측이 복제 반복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인 관찰이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는가? ■증거가 한 패턴이 다른 패턴보다 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가? ■특정 사건에서 발생한 관계가 다른 상황 또는 관계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설명이 국부적 관찰을 정합적으로 설명하는가? ■설명이 검증 가능한 가설과 정합하는가? ■설명이 새로운 핵심 변수 또는 관계를 식별하는가? ■설명이 개념적 관계에 대한 지도를 제공하는가? ■설명이 이상 현상을 신중하게 문서화하는가?

※ Behfar & Okhuysen(2018: 326). Janiszewski & van Osselaer(2021: 178). SÆtre & Van de Ven (2021: 685). Saunders, Lewis & Thornhill(2019: 153)



[그림 5] 그림 실체에 관한 설명적 가설은?

※ 출처: Schvaneveldt(20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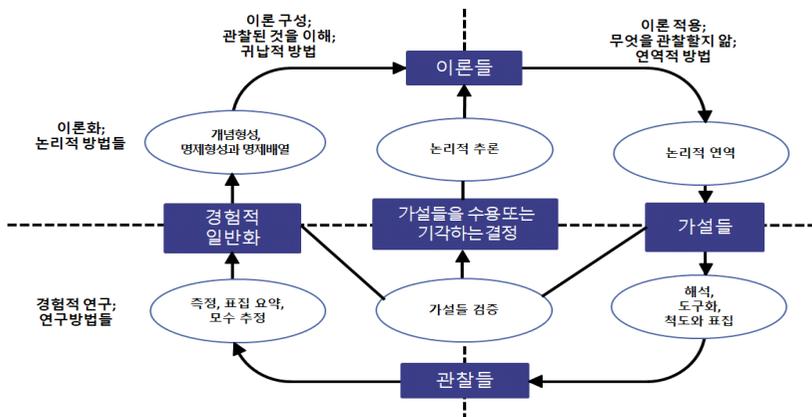
해당 그림은 다양한 형태의 설명적 가설로 상이하게 기술될 수 있다. 예컨대, ‘이쭈시개를 활용한 은행 꼬치’, ‘바베큐용 철심이 관통한 양파’, ‘끈 위의 풍선’ 등의 경쟁적 가설이 동시에 이용 가능하다. 그런데 이들 가설은 유사 유추에 근거하여 [그림 5](현상)에 관하여 매우 밀접한 상호근사치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 가지 경쟁가설 중에서 보다는 나은 최선의 가설을 선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이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또 다른 설명적 진술 가설은 ‘서로 다른 나무에 매달려 즐고 있는 두 마리의 코알라’다. 전술된 ‘가추 관별준거’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가설은 경쟁가설에 비해 관찰 현상(그림)에 관하여 보다 적합하면서도 유의미한 차별적인 설명력을 제공한다. 요컨대, 가추는 놀라운 연구 증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설 도출과 타당한 이론 생성을 목표로 하는 창의적 추론 과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추 추론은 지식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들어 과학 분야 특히, 전문가시스템 설계, AI 기반 의학진단 등에서 자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연구방법 분야에서도 이론 생성과 이론화과정의 출발점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 내용은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

2. 이론발달을 위한 가추기반 연구방법: 내용과 체계

연역과 귀납의 상호연계·병행을 촉진할 수 있는 가추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 교육행정학계의 인식과 학문공동체 구성원의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또한, 이론구축 과정에서의 가추의 활용성 역시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가

추에 관한 관련 선행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이를 예증한다. 과학적 연구방법으로서 가치의 존재감이 제반 학문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이유는 관련 문헌상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세 가지 잠정적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전통적으로 이론 생성·발달을 위한 연구 수행의 논리적 방법은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규정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추정이다. 둘째, 학문수행 연구방법으로 연역 접근과 귀납법은 각기 과학철학의 제반 관점 즉, 실증주의(양적 접근)와 반실증주의(주로 질적 접근) 진영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되면서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일부 철학적 관점(예: 실용주의)이 논리적 사고 방식으로서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학적 이론이 가치 과정을 통해 어떻게 생성·발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실천 지침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위의 세 가지 이유에 더해서 연역과 귀납논리에 근거하여 과학 이론의 생성·발달 주기를 개괄한 Wallace의 개념 체계도 역시 제 3의 논리 형태로서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학문공동체의 수용성과 긍정적 인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Wallace는 [그림 6]과 같이 과학적 연구수행과 이론 발달은 연역과 귀납 및 그에 수반하는 연구 절차로 구성된 선순환 연속체 주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연역적 연구는 (기존) 이론에서 시작되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전략을 활용한다. 귀납적 연구는 자료 관찰에서 출발하여 이론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림 6] 과학적 이론 발달 주기

※ 출처: Wallace(1971: 18-23) 내용을 통합

그런데 놀라운 현상에 대한 가설 생성 추론 방식은 전술된 Wallace의 전통적인 연역·귀납법 체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가추는 '놀라운 현상(또는 사실)'이 관찰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논리 구조상 '놀라운 현상'은 전제가 아닌 일종의 결론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결론(관찰된 놀라운 현상)에 기초하여 결론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가능한 전제들(설명적 사례들)이 가설로 결정되며, 이 설명적 가설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놀라운 현상)도 당연히 참일 것이라고 추리된다. 즉, 전제 집합(설명적 사례들)이 결론(놀라운 현상)을 설명하기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전제 집합도 결국 참되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추는 Sherlock Holmes가 애용하는 탐정의 논리로도 알려져 있다.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 가추의 연구법 활용을 강조한 대표 학자는 질적 연구자인 Tavory와 Timmermans, 심리학자이자 연구방법 철학자인 Brian Haig를 들 수 있다. Tavory와 Timmermans(2012; 2014)는 자료 기반 분석의 귀납적 질적 연구형태의 한계점(특히, 근거이론의 자료 코딩 분석 몰입으로 인한 새로운 이론 생성 실패 등)과 이론 중심의 (가설) 연역적 양적 분석과 편중 현상을 균형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서 가추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추 기반의 경험적 질적 연구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서 '현상과 자료의 재검토와 낯설게 만들기 및 대안적 사례 확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자료 관찰 중심 귀납법과 이론 기반 연역법 간의 내재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연구 방안으로 가추(자료와 이론 양자 사이를 순환 반복하여 현상을 체계적으로 탐구)의 중요성을 학계에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전환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요컨대, Tavory와 Timmermans는 '질적 연구 분석의 심화 발전을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가추의 당위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 가설이 이론발달 주기에서 어떻게 생성되어 체계적으로 검증·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Hammersley, 2016: 749).⁷⁾

Haig는 Tavory와 Timmermans와 마찬가지로 근거이론의 한계점(자료의 귀납적 분석 몰입이 초래하는 새로운 이론 생성 부족, 자료의 지속적 비교 실

7) Tavory와 Timmermans 저작물의 장·단점은 질적 연구 학술지(Qualitative Research)와 사회학 학술지(British Journal of Sociology, Contemporary Sociology) 등의 서평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분석된 바 있다.

행과 이론적 민감성 제고 과정에 있어서의 가추활용 미흡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연구방안으로서 가추 사고체계의 중요성을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Tavory와 Timmermans와는 달리 Haig는 질적 연구 분야를 넘어서 과학적 실재론과 자연주의 및 인식론 시각(정합론, 신빙주의) 등 제반 과학철학의 주요 장점을 실재론의 포괄적 기제(자연주의 과학적 실재론) 안에 집대성하여 양적·질적 연구방법의 특·장점을 총괄적으로 교차 활용하는 가추법 기반의 이론구축 연구방법철학을 체계화하고 있다(Haig, 2014, 2018a, 2018b).⁸⁾ 그의 핵심 주장은 방법 가추이론(the Abductive Theory of Method: 이하 ATOM), 이론구성 방법론(Theory Construction Methodology: 이하 TCM)으로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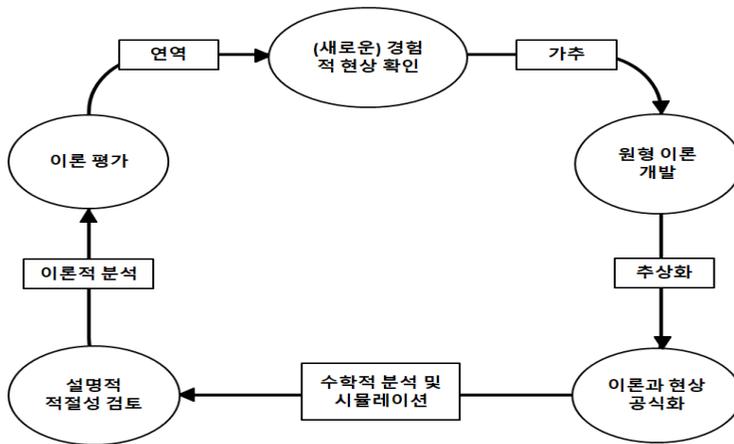
Haig 등은 가추 추론의 논증 양식을 과학적 실재론의 관점(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이론은 최근사치 수준에서 실재를 구명함)에 기반해서 다음과 같이 변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세계 즉, 실재'를 설명하기 위한 초기 원형이론(prototheory)의 가추적 개발 가능성을 강조한다(Borsboom et al, 2021: 759).

“이론 T가 현상 P를 추정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만약 세계가 이론 T가 묘사한 그대로 존재한다면 당연히 현상 P도 이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heory T putatively explains phenomenon P” means “if the world were as T says it is, P would follow as a matter of course”).

Haig 등은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형성된 최선의 설명력을 갖춘 가추적 이론체계를 통해서 실제적 존재가 궁극적으로 구명될 수 있음(예컨대, 전자와 바이러스의 존재는 이를 가설적으로 추론한 이론들의 충분한 현실적 설명력에 의해서 확인됨)을 주장하면서, Wallace의 이론 생성 주기와는 차별화되는 가추기반의 이론 발달 주기를 [그림 7]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TCM 모델은 관련 현상 식별, 초기 원형이론의 공식화, 공식모델 개발, 공식모델의 적정성 확인, 최종 구축된 이론의 전체적 가치 평가라는 순차적인 다섯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8) Haig의 연구방법철학은 제반 과학철학 논쟁과 사회과학 이론발달의 추세 및 연구방법론 분야의 쟁점 등을 포괄하면서 현재까지 진화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한된 지면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핵심 특징만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Haig의 주요 저작물 목록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University of Canterbury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researchprofile.canterbury.ac.nz/Researcher.aspx?Researcherid=86078>)



[그림 7] 가추기반 이론발달 주기

※ 출처: Borsboom et al. (2021: 762)

Haig 등은 이론구성의 첫 번째 단계는 확고하면서도 일관되고 재현 가능한 현상의 식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단순 개별 자료가 아닌 지속적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한 가추적 원형 이론 개발을 통해서 최선의 설명력을 갖춘 이론의 공식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화 이후 확립된 초기 공식 이론은 모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설명적 적절성이 검토되며, 최종적으로는 좋은 이론의 덕목(정확성, 일관성, 간결성, 생산성, 설명적 범위의 포괄성, 유추 등)에 의해서 그 이론적 가치가 전체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가추 기반 이론생성·발달 과정은 새로운 다양한 현상을 추가적으로 관찰 경험하면서 이론의 발달 범위와 깊이가 확대 심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 가추기반 이론발달 주기는 이론형성의 출발점은 현상이며, 이론형성에 있어서의 가추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

Haig는 놀라운 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 가설의 생성·발달·평가를 단계별로 총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행전략과 연구방법 및 추론형태를 현실적 설명력을 갖춘 양적·질적 연구의 특화된 기법(예: 근거이론, 탐색적 요인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 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방법 가추이론 즉, ATOM(the Abductive Theory of Method)으로 명명된다.⁹⁾

9) ATOM의 각 단계는 전통적인 가설 연역적 접근과 귀납법도 포괄적으로 적용되지만 전체 구조적 특징은 가추적 논리 구조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방법 가추론으로 지칭된다.

<표 5> 이론 구축을 위한 방법 가추론

단계	현상 탐지	이론 구성		
		생성	개발	평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란 통제 ■ 연구도구 규격화 ■ 자료 분석 ■ 발견결과와 구성적 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그럴듯한 설명적 이론들을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추모델링을 통해서 이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적 이론들과 비교해서 이론의 설명적 가치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자료분석 ■ 탐색적 요인분석 ■ 컴퓨터 집약포집 방법들 ■ 메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색적 요인분석 ■ 근거이론 ■ 발견법(휴리스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스모델로부터 긍정적·부정적 유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적 정합성 이론 ■ 구조방정식 모델¹⁰⁾
추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거적 귀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재적 가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추적 가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상설명으로의 추론

※ 출처: Haig(2014: 25)

ATOM은 이론 구성을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는 이론 구성의 전체 조건이자 출발점으로서 경험적 일반화를 통한 현상 감지다. 현상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관해 안정적이면서 일관성을 가진 특징적 모습으로서 이론의 설명 대상이자 초점이 된다. 둘째는 현상에 관한 주장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구성 단계로서 이론 생성과 개발 및 평가라는 세부 하위 단계를 포함한다. 현상 탐구가 왜 과학적 이론 형성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ATOM에 따르면 개별 연구자들은 현상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하여 현상 관련 혼동 요인 통제, 반복적 연구수행, 연구 도구 보정, 양적·질적 유형의 자료 분석 전략을 다양하게 가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상 탐지 단계에서 활용되는 추론 양식은 열거적 귀납(enumerative induction) 형태이다. 이는 구체적 현상과 명시적 사실에 대한 개별적 관찰의 반복적(열거적) 축적을 통해서 경험적 일반화가 학습되어 결론 설명체계가 도출되는 논증 구조(전형적인 일반적 귀납법)이다.

10)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가설 연역 방식으로 모델을 검증하는 다변량 통계방법이다(다중 회귀, 경로분석, 확증적 요인분석의 조합 활용). Haig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이 가설연역 접근뿐만 아니라 IBE 변형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aig(2014) 5장 참조.

한편, ATOM의 이론 생성 단계는 확인된 현상에 대한 그럴듯한 가설 창출에 근거하여 설명적 이론이 창출되는 곳으로서 양적·질적 연구의 다양한 기법(탐색적 요인분석, 근거이론 등)이 포괄적으로 활용된다.¹¹⁾ 이 단계에서의 가치 추론 양식은 유전자, 비인지적 기질(GRIT) 등과 같이 이전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실체나 속성의 존재를 가설적으로 추정하는 존재적 가치(existential abduction) 형식을 표방한다. Haig는 양적 연구에서 상관관계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잠재변수 가정에 활용되는 탐색적 요인분석이 실체에 대한 공통요인 도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가치 추론의 한 형태인 존재적 가치의 형태를 가진다고 주장한다.¹²⁾

ATOM 기반 이론 개발 단계는 유추적 가치를 전적으로 활용한다. 유추는 둘 혹은 그 이상의 현상이나 복잡한 현상들 사이에서 기능적 유사성이나 일치하는 내적 관련성을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후천적 시각·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던 Helen Keller가 보고 들을 수 없었던 것과 맛, 냄새, 느낌으로 알았던 것들 사이에서 “수많은 연상과 유사성”을 도출하여 직접 지각할 수 없는 세계를 이해한 사례는 유추적 상상력이 실제로 발휘된 대표적 사례이다.¹³⁾ 유추적 가치는 유추 형태와 가치 형태를 결합한 추론 방식이다. 유추적 가치에 근거한 유추 모델링(예: 컴퓨터와의 유추를 통한 인간 마음의 연산 모델 개발 등)을 통하여 ATOM은 세계에 관한 인과기제 본질에 가까운 이론을 개발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ATOM의 마지막 단계인 이론 평가는 이론의 설명력 검증을 위하여 최상의 설명으로의 추론(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이하 IBE)을 활용한다. Wallace의 이론발달 주기와 같은 기존의 이론 구성 개념도는 이론이 어떠한

11) 질적 자료 코딩과 지속적 비교 분석 및 이론적 포화 등으로 특징화되는 근거이론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지면상 생략한다. Suddaby(2006)는 경영학 분야 학술지 편집장으로 관찰·체험한 경험에 근거하여 근거이론 연구의 오류적 사고(선행문헌 간과, 미가공의 원자료 분석 몰입, 단어 개수와 내용 분석에 치중, 코딩 과잉 강조, 근거이론의 완전성에 대한 맹신, 근거이론 연구 수행은 용이하다는 착각, 근거이론을 활용하면 방법론이 부재해도 된다는 변명)를 상세하게 제시한 바 있다. 전통적 근거이론에 관한 국내 문헌 자료는 변기용(2020)을, 신생 관점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2세대 근거이론(예컨대 Clarkeian 상황적 근거이론, Schatzmanian 차원적 근거 이론 등)의 발달 상황과 전통적 근거이론 간의 관련 쟁점 분석은 Morse 등(2021)의 최신 저작물을 참조할 것

12) 자세한 논의는 Haig(2005) 참조

13) 원시부족민들이 무는 개미를 이용해 벌어진 상처를 잡아매는 것을 관찰한 후 외과용 스테이플러가 개발된 사례나 산책 후 옷에 달라붙은 엉덩퀴 구조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후 벨크로(일명 찍찍이)를 구안하여 의류와 가방 등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유추적 사고의 전형이다(Root-Bernstein & Root-Bernstein, 2001: Ch. 6).

생성 절차 과정을 통해서 발달되며, 최종적으로 그 가치가 어떤 준거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평가되는 지에 관한 논의를 전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이에 반해 ATOM 기반 이론 구성은 경쟁이론 중 최선의 증거기반의 보다 나은 설명력을 제공하는 이론(즉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 즉, 실재에 대한 대응적 정합성을 가지는 최상의 이론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BE는 일종의 가치 추론의 한 유형으로서 다음과 같은 논증 구조를 가진다(Haig, 2014: 109).

P1, P2, ... 는 놀라운 경험적 현상이다.

이론 T는 P1, P2, ...등을 설명한다.

다른 어떤 이론도 T만큼 P1, P2, ...등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론 T가 최선의 설명으로 수용된다.

Thagard(2000)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으로서 설명적 정합이론(the theory of explanatory coherence)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의 인과적 가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ECHO: Explanatory Coherence by Harmany Optimization)으로서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Thagard에 따르면 IBE는 결국 세계에 대한 증거 기반의 최상의 설명적 정합성을 갖춘 이론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설명적 정합성은 “보다 많은 설명적 범위의 깊이와 넓이의 포괄성”, “최소한의 가정에 근거한 단순성”, “인과기저 요인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신뢰할 만한 이론에 대한 유추적 설명(예: 창조론보다는 다윈의 진화이론)” 등에 근거하여 최종 평가된다.

V. 결론

가설연역적 성격의 양적 접근과 귀납적 질적 접근은 상이한 과학철학 전제(실증주의 vs 후기실증주의)와 차별적 이론관(설명지향적 이론 vs 이해지향적 이론) 및 선호되는 가용 방법(통계분석 vs 면담사례분석)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구방법론 쟁점을 야기하였다. 이는 교육행정학과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서 경쟁적 관점을 주창하는 학문공동체 간에 극단적 대립(패러다임 전쟁)과 공존(패러다임 대화) 및 융합(혼합방법연구를 통한 패러다임 통합) 형태의 치열한 논쟁을 촉발하였다. 그러나 이론이 실제로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추론방식과 사고과정 즉, 이론화에 대한 학문공동체의 체계적 관심과 관련 연구결과 집적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교육행정학의 가설연역 기반의 행동과학적 접근을 정착시켰던 ‘이론화운동’의 핵심 내용과 쟁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연역과 귀납 논증구조의 장점과 한계점을 상호 보완하여 새로운 발견을 위한 가설생성과 이론개발 및 평가과정을 총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추 기반 연구방법론 관련 논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가추 기반 ATOM은 양적·질적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활용되던 다양한 연구 방법과 연구 전략을 포괄적 설명기제(자연주의 과학적 실재론) 틀 안에서 집대성함으로써 전통적인 행동과학적 연구와 가설연역적 접근의 가설확증의 편재성과 그로 인한 이론화의 편향성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연구수행과 이론화의 출발점은 가설연역체제의 가설검증을 통한 경험적 적절성(empirical adequacy)의 단순 확인 과정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다양한 가추 논증 유형이 경험적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탐지 단계에서부터 이론 생성·개발·평가라는 선순환 이론 구축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이론화 발달기제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각 단계별로 상이한 가추 논증 특성을 차별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가추 논증 기반의 교육행정학 이론화 구축에 대한 실천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향후 작업은 과학철학과 연구방법론 및 연구기법에 대한 탐구 열정과 실행 의지를 시연하는 학문공동체의 공통 과제로 간주될 필요성이 있다.¹⁴⁾

참고문헌

- 김종철(1981).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박선형(1999). 주관주의적 교육행정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17(3), 217-249.
- 박선형(2002). 교육행정 이론발달의 철학적 연원에 대한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20(4), 133-157.
- 박선형(2006). 선진국의 교육행정 지식기반: 논의 동향과 시사점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14) 가추 기반 ATOM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Romeijn(2008)을, 이에 대한 반론적 설명적 진술은 Haig(2014)의 Ch. 6 참조

- 24(2), 1-29.
- 박선형(2010). 교육행정학의 혼합방법연구 활성화를 위한 예비적 논의. *교육행정학연구*, 28(2), 27-54.
- 박선형(2012). 교육행정철학의 발전 가능성과 향후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0(1), 53-77.
- 박선형(2022). 교육정치학: 이론화와 과학철학 및 연구방법론 쟁점 분석, 29(1), 29-63.
- 박선형(2023). 교육행정학 이론발달의 과학철학 쟁점과 관련 논점 탐구: 과학적 실재론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41(3), 281-315.
- 백현기(1958). *교육행정학*. 서울: 을유문화사.
- 백현기(1976). *교육행정의 기초*. 서울: 배영사.
- 변기용(2018). 한국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분법적 배타성 극복을 위한 대안적 지점의 모색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6(4), 1-40.
- 변기용(2020). *근거이론적 방법*. 서울: 학지사.
- 변기용·이현주·이승희·손다운. (2022). 비판적 실재론의 교육행정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함의와 연구의 실제. *교육행정학연구*, 40(1), 691-720.
- 신현석(2009). 한국적 교육행정학의 방법적 기반. *교육행정학연구*, 27(3), 23-56.
- 신현석·주영효·정수현·윤혜원(2022). 한국 교육행정학 분야 혼합방법연구의 질 평가. *교육행정학연구*, 40(5), 61-90.
- Bates, R. J. (1980).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16(2), 1-20.
- Behfar, K., & Okhuysen, G. (2018). Discovery within validation logic: Deliberately surfacing, complementing, and substituting abductive reasoning in hypothetico-deductive inquiry. *Organization Science*, 29(2), 323-340.
- Borsboom, D., van der Mass, H. I. J., Dalege, J., Kievit, R. A., & Haig, B. D. (2021). Theory construction methodology: A practical framework for building theories in psycholog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6(4), 756-766.
- Chalmers, A. F. (1982). (2nd Ed.). *What is this thing called science?* Queensland: 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 Culbertson, J.A. (1983). Theory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Echoes from critical thinkers. *Educational Researcher*, 12(10), 15-22.
- Danermark, B., Ekström, M., & Karlsson, J. C. (2019) (2nd Ed.). *Explaining society: Critical realism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Routledge.

- Eco, U., & Sebeok, T. A. (1984). *The sign of three: Dupin, Holmes and Peirce*. Indiana University Press. 김주환 · 한은경 역(2015). *셜록 홈즈, 기호학자를 만나다: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서울: 이마.
- Evers, C. W., & Lakomski, G. (1991). *Know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Contemporary methodological controversies in educational research*. London: Pergamon Press.
- Evers, C. W., & Lakomski, G. (2000). *Do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A theory of administrative practice*. London: Pergamon Press.
- Foster, W. (1986). *Paradigms and Promises*. New York: Prometheus Books.
- Greenfield, T. B. (1975). Theory about organization: A new perspective and its implications for schools. In M. Hughes (Ed.), *Administering education: International challenges*. pp. 71-99. London: Athlone.
- Griffiths, D. E. (1957). Towards a theory of administrative behavior. In R. F. Campbell & R. T. Gregg (Eds.). *Administrative behavior in education*. New York: Harper.
- Griffiths, D. E. (1964)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ory. In D. E. Griffiths (Ed.). *Behavioral science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sixty-third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p. 95-118.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 Griffiths, D. E. (1983). Evolution in research and theory: A study of prominent researchers.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19(3), 201-221.
- Griffiths, D. E. (1985). *Administrative theory in transition*, Victoria: Deakin University Press.
- Haig, B. D. (200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ory generation, and scientific method.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0, 303-329.
- Haig, B. D. (2012). Abductive learning. In N. M. Seel. (Ed.). *Encyclopedia of the science of learning*. pp. 10-12. New York: Springer.
- Haig, B. D. (2014). *Investigating the psychological world*. MIT Press.
- Haig, B. D. (2018a). *The philosophy of quantitative methods: Understanding stat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ig, B. D. (2018b). *Method matters in psychology: Essays in applied philosophy of Science*. Springer

- Haig, B. D., & Evers, C. W. (2016). *Realist inquiry in social science*. London: Sage.
- Hammersley, M. (2016). Book review of *abductive analysis: Theorizing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16(6), 748-750.
- Hempel, C. G. (1966). *Philosophy of natural Science*. Prentice-Hall.
- Janiszewski, C., & van Osselaer, S M, J. (2021). *Abductive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32, 175-193.
- Lewin, K. (1943). *Psychology and the process of group liv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 113-131.
- Lipscomb, M. (2012) *Abductive reasoning and qualitative research*, *Nursing Philosophy*, 13(4), 244-56.
- Magnani, L. (Ed.). (2023). *Handbook of abductive cognition*. Switzerland: Springer.
- Morse, J. M., Bowers, B. J., Charmaz, K., Clarke, A. E., Corbin, J., & Porr, C. J. with Stern, P. N. (2021) (Eds.).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e second generation revisited*. New York & London: Routledge.
- Mort. P. R. (1946). *Principles of school administration-A synthesis of basic concepts*. New York: McGraw-hill.
- Popper, K. 1959.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London: Hutchinson.
- Ribbins, P. (1993). *Philosophy and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Educational Management & administration* 21(3).
- Ritz, B. (2020). *Comparing abduction and retroduction in Peircean pragmatism and critical realism*. *Journal of Critical Realism*, 19(5), 456-465.
- Romeijin, J. W. (2008). *The all-too-flexible abductive method: ATOM' normative statu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4, 1023-1036.
- Root-Bernstein, R. S., & Root-Bernstein, M. M. (2001). *Sparks of genius: The thirteen tools of the world' s most creative people*. HarperOne.
- Root-Bernstein, R. S., & Root-Bernstein, M. M. (2001). *Sparks of genius: The thirteen tools of the world' s most creative people*. HarperOne.
- SÆtre, A. S., & Van de Ven, A. (2021). *Generating theory by abduc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6(4), 684-701.
- Swedberg, R. (2014). *Theorizing in social science: The context of discovery*. California: Standford University Press.
- Saunders, M., Lewis, P., & Thornhill, A. (2019). *Research methods for business*

students. Pearson.

Schvaneveldt, R. W. (2012). Abductive reasoning. In N. M. Seel. (Ed.). *Encyclopedia of the science of learning*. pp. 12-15. New York: Springer.

Simon H. A. (1976). (3rd Ed.) *Administrative behavior: A study of decision-making processe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New York: Free Press.

Suddaby, R. (2006). From the editors: What grounded theory is no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9(4), 633-642.

Tavory, I., & Timmermans, S. (2012). Theory construction in qualitative research: From grounded theory to abductive analysis. *Sociological Theory*, 30(3), 167-186.

Tavory, I., & Timmermans, S. (2014). *Abductive analysis: Theorizing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agard, P. (2000). *Coherence and thought in action*. Cambridge: MIT Press.

Wallace, W. L. (1971). *The logic of science in sociology*. Chicago, IL: Aldine de Gruyter.

자유주제 발표 세션Ⅳ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 방안 탐색

류 명 혜(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I. 서론(緒論)

‘지역, 국가와 고등교육 경쟁력 : 전망과 과제’ 라는 대주제 하에 개최되는 2023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 학술대회에 즈음하여 교육행정학자의 일원으로서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 방안 탐색’ 발표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인원인 학생들은 초중등학교를 거쳐 입학하게 된다. 초중등학교 교원은 이 고등교육 단계 학생들을 교육하여 졸업시키는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고등교육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발표 주제인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탐색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23년 7월 18일 초등학교 교내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된 교사 사건이다. 소위 ‘서이초’ 사건이다. 언론 보도를 통하여 ‘서이초’ 사건으로 지칭되기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어 진행된 주말 교사 집회에서 ‘서이초 교사’ 표현이 사용되는 등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네이밍(Naming)이 되었다.

“초등 교사 교내 사망”은 그 학교의 구성원들인 교원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충격적인 일임은 물론이고, 뉴스 보도를 통하여 접하는 전 국민들에게 놀라움과 큰 슬픔이 되었다. 사망 사건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관심이 가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교사가 초등학교 내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되었기에 왜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 크고 깊게 제기되었음은 물론이다. 사망 교사가 학급 담임교사 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교직 입직 연한이 짧은 젊은 여성이고, 학부모로부터의 민원 등 과정에 힘들어하던 근무 내용이 알려지게 되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사망 사건 수사 등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이초’ 사망 교사 뿐만 아니라 많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힘들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이는 교원의 근무 조건에 해당되고, 교육행정, 특히 교육인사행정, 교원 인사행정의 중요한 영역이다.

이와 같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사회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학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일이다. 이 사건은 교권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교권 문제는 교원의 지위와 역할에 관련되며 교권의 추락은 결국 교원의 사기(Morale) 저하로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교육행정 당국의 현황 파악 및 문제 인식,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의 수립, 집행이 긴급히 요구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탐색이다.

II. ‘교원 사기(Morale)’의 중요성

한국은 높은 ‘교육열’의 나라로 지칭된 지 오래이다. ‘교육열(Education Fever)’은 전 국민이 교육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대변하는 조어이다. 높은 교육열은 마음과 정서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예산 중 교육부 예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오랫동안 차지하는 등 국가 자원 투입 면에서도 그러하였다. 이러한 높은 교육열을 뒷받침하는 국가 예산이라는 자원 투입(Input)은 국가적으로는 교육을 통하여 양성, 배출된 인재가 국가와 사회 발전의 인력으로 충원되기에 타당한 선택이었고, 가정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 많이 교육시킨 자녀가 출세하여 가문을 빛내고, 가솔을 부양하였기에 효과적인 결정으로 평가되었다.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을 받아야 했고, 받은 그들이 인재가 되어 목적에 부응하도록 교육을 수행한 주체는 교원, 교사들이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인재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의 과정을 잘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교육의 산출(Output) 요인이다. 교육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교원, 교사들이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졸업하여 국가와 사회에서 일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교원이 해 낸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에 대한 전 국민의 높은 관심과 학교 교육의 산출은 교원 즉 교사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 의당 교원, 즉 교사들의 자부심과 직업적 만족도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이는 교원의 사기(Morale)로 연결되었을 것이고, 사기는 교실의 활기를 가져 와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한국이 근대화, 산업화 과업을 국정 목표로 삼고 추진할 때, 그 인력을 학교 교육의 결과로부터 공급받던 시대인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절에 특히 그러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교사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기적 급여를 월급으로 받고, 학생 · 학부모로부터는 존경을 받으며, 학생의 교과 지도와 생활 지도를 하였다. 당시에 교사는 지역사회에서도 지도자로 여겨졌다.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대구사범학교 졸업 후 경북 지역에서 당시 초등교육 기관인 소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원 경력자이다.

모든 시기에 교원 경력자를 대통령으로 맞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마침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통치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정치하고자 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발전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원을 우대하여 교육의 성과를 내도록 해서 국가 발전의 주된 인력으로 활용했던 지혜를 현 윤석열 대통령이 교훈으로 이어받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 대응 과정에 고통을 받으며 근무하고,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고 급기야 죽기까지 하는 이 교육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원인을 밝혀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높은 관심과 교원 존중 정책은 교원의 사기(Morale)를 높여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으로 보답될 것이다.

III. 교원의 사기 : 현황과 문제점

1. 교원 vs 학생, 교원 vs 학부모

최근에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인 교원과 학생을 권리에 대하여 이분법적 구도로 규정짓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학생 교육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인인 교원과 학부모에 대하여 권한을 두고 대립적 존재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두도록 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직전 정부의 교육에 대한 기조도 작용하여 교원들은 기존의 권위에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혼란을 겪게 된다. 예를 들면 학급에서 수업 시간에 휴대 전화 사용 및 소지에 관한 교원의 지도 권한 문제이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휴대 전화 소지가 학생의 주의를 흐리고, 자칫 손을 대어 사용하게 되면, 본인의 수업 주의가

분산됨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수업까지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수업 중에는 소리가 나지 않게 셋팅하여 사물함에 두기를 지시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한 지시가 학생의 인권 침해라며 항의받고, 더구나 학생 · 학부모 입장에서 수업 중에 교사가 잘못된 행동(나쁜 짓)을 할 때 녹음 녹화 등 기록하여 고발할 도구로 소지해야 한다는 등 요구도 있다.

한편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와 관련하여 전통적 관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을 전인교육하며, 학생이 잘못하여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끼치면 지적하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도록 지도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할 경우,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일단 신고되면 담임교사는 형사 절차에 불려 다니는 등 고통 받게 된다. 학부모가 법과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악용하여 교사를 고통 받게 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이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서이초’ 사건과 같은 일이 생겼고,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2. 교육행정의 방기(放棄)

교원의 권리는 학생의 인권과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제로 섬 관계의 것이 아니다. 학생을 잘 교육하기 위하여 교원의 권리가 존재하고, 그러기에 중요하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자로서의 전문적 판단은 학부모의 자기 자녀 일방적 감싸기와는 별개로 확립되어야 할 직업적 권한이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시민 사회의 요구와 이에 대한 직전 정부의 호응 정책은 반교육적인 것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주말 집회 등 운동을 통하여 아동학대법 관련 개선 요구가 실현되어 가고는 있으나, 사회 전반에 만연된 교원 학생간 대립 구도, 교사 교육권에 대한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통제하지 못하는 교육행정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전통적 관점에서의 교원의 권리와 의무가 침해되고, 학부모의 담임교사 괴롭힘 등이 만연해 있는데도 교원의 고충 등 근무 조건에 대하여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교사 개개인이 당하다가 죽어가도록 둔 현실은 방기(放棄)된 교육행정의 결과이다. 교원에게 교육 활동상 권한이 부재하고, 학부모와 민원의 상대방으로 관계 지워져 경찰서를 오가게

되는데, 교사가 과연 고유 업무인 교재 연구와 학생의 진로 설계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교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교사 숫자만 줄일 생각에 즐거워하고 있던 직전 정부의 교육부장관들에 대하여 교원들이 얼마나 크게 실망하였을지 모른다. 교사의 교육권 문제는 결국 학생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초등 교사 교내 사망(2023. 7. 18)” 사건과 이 사건의 반향이 교육계에 던지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고 그 해결에는 장기적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라도 즉시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교육 당국의 책무이다.

IV. 교원 사기 저하의 원인

1. 교원 정원 감축에의 설레임

직전 정부는 향후 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 교원 양성 대학 입학 정원도 감축한다고 천명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원을 정부 인건비 비중을 차지하는 존재로 취급한다. 정부 중에서도 예산 부처의 시각이 그러하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인구가 줄어들면, 단순히 교원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데 없었다. 학교 교육에는 학급의 규모가 있고, 적정 학급 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요인 각각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 각각에 따른 적정 교원 수가 산출되고, 그런 연후에 교원 정원에 관하여 계획하는 것이 순서인데, 교육부는 스스로 그러한 검토를 할 생각도 없이 기획재정부 등 예산 부처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갈 뿐이었다. 가령 인구 5천만에 교원 100이었다가 앞으로 인구가 3천 5백만으로 줄테니, 교원은 70으로 하면 된다, 교원 30을 줄이니 인건비가 30%나 줄어든다며 쾌재를 부르는 예산 당국 직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부의 마인드였던 것이다. 양적 성장 다음에는 질적 향상을 추구하게 된다.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학생 한명 한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교육 여건을 갖추어 주도록 정부가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교사 수를 줄일 계산에 인건비 감축에 설레어 있던 직전 정부이다. 이러하니 교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오죽하면,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는가! 현 교육부장관은 경제학 전공의 부총리이고, 교육부장관 부총리를 두 번 째 수행하느니만큼 직전 정부까지의 교육부의 잘못

을 깊이 살펴 정부의 교육 정책, 교원 정책의 기초를 올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2. 교육 목적의 몰각

모든 기관에는 고유의 목적이 있다. 군대는 국방, 기업체는 이윤 추구 등 목적이 있다. 학교는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각 기관은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화되어 있다. 학교는 교육을 위하여 교직원이 일하고, 교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화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는 최근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학생 교육 즉 교과 지도, 생활 지도, 진로 지도 등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교사가 활동하기에 최적화되기보다는 다른 일들에 치중되어 있다시피 하다. 주로 복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능하고 있다. 학교가 급식, 보육, 주차장, 주민 체육 시설 개방 등 복지 기능에 활용되고 있다. 물론 기관이 고유 목적에 종사하다가도 일부 봉사를 하기도 한다. 예컨대, 군대가 국방 목적의 기관이지만 홍수 등 재난 시에 구난, 수습에 나서기도 한다. 기업체는 이윤 추구라는 고유 목적에 매진하다가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 등 봉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 교육이라는 고유 목적에 진력하다가 가끔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큰 비중의 시간과 공간을 교육이라는 고유 목적 외에 복지 영역에 투입하도록 동원된다. 그 시발은 학교 급식이 처음 시행될 때였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점심 시간에도 담임 학생들에 대한 주의를 놓지 못하게 되었다. 도시락을 먹던 시절에 비하여 단체 급식 중 어린 학생이 혹 국물에 데일까 등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영양사, 조리 인원, 급식 인원이 있지만, 초기에는 학부모가 배식 봉사를 담당하여 담임교사가 매일 급식 담당 학부모(자모) 어레인지(Arrangge)를 하였다. 교사가 교육 활동 이외에 급식 관련 부담을 지게 되었다. 교수 학습 활동을 본위로 하여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원의 업무 부담이 급식 관련하여 추가된 것이다.

정부가 확대하겠다고 하는 돌봄을 학교에서 하는 일도 학교와 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돌봄 교사나 인원을 별도로 쓴다고는 하여도 자신의 학급 담임 학생(아동)이 학교 내에서 다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 출석하기까지 교사는 신경이 쓰이게 된다. 학생에게 유사시 학부모는 정

규 학습이든 방과후 돌봄 과정에서이든 대개 담임교사에게 연락, 문의, 항의, 원망하게 된다. 이렇게 돌봄 확장이 교사에게는 근무의 연장인 셈이다. 학교 시설의 주민 개방에 대하여 예컨대 조기 축구회에 개방하면, 축구장 유지, 청소는 물론이고, 화장실 이용을 위한 교사(校舍) 내 경유 과정의 어지럽힘 관리, 흡연 등 문제가 따른다. 학교 건물과 시설, 설비 등은 학생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지, 학교 교육 외 활동을 위하여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학교 후 건물과 시설의 휴식이 필요하다. 학교는 미성년의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특화된 학교 건물, 시설, 설비이니 학생들이 누리도록 개방에 신중해야 한다.

물론 국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 복지에 조력해야 하겠지만, 한국은 OECD 회원 국가이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국가이며, 지표에 따라서는 선진국에 해당되기도 하는 생활 수준의 국가이다. 주민 복지 요구는 별도의 예산으로 신설, 신축하여 소화해야지 학교 시설 설비가 복지 요구에 동원될 시대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생색내는 데 필요한 시설의 신축 없이 주민들에게 당장 인심을 쓰느라고 학교를 이용하는 데 이를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교육부장관은 이를 직시하여 학교가 복지에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고유 목적 이외의 어떤 활동도 할 생각을 지자체장 등 정치인들이 원천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방패막이 역할을 교육부장관 부총리가 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 교육이라는 고유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교사들은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교육전문가이다. 학교가 고유 목적 외 활동인 급식, 돌봄, 주차장, 주민 복합시설에 동원됨은 교육이 경시된다는 표시이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전문가에 대한 존경은 하는 일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 학교라는 곳이 학생 교육 외에 우리 시장이 우리 구청장이 아무 때나 아무 일이나 하라하면 하는 곳으로 인식되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사회에서 존경하겠는가? 직전 정부까지의 이러한 교육 경시와 학교 교육 목적의 몰각으로 인하여 교원의 사기(Morale)가 저하되었다.

3. 교육에 대하여 무지한 교육행정가

교육부는 소관 인원이 가장 많은 정부 부처이다. 교원 수가 많아서 그렇다. 교육부장관은 소관 인원에 대하여 리더십을 행사하는 교육행정가이다.

최대 인원인 교원에 대하여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그 인원에 대하여 알고, 그 인원의 근무 조건을 유지시키며 처우와 복지를 향상 증진시키려 노력하는 존재이어야 한다. 그런데 직전 정부에서 교육부장관 인선시에 이러한 점은 도외시하고, 정치가 위주로 임명하여 교육부장관 부총리 직을 수행하도록 한 바 있다. 대통령은 교원의 권리와 의무, 학생 교육 활동의 본질 등을 이해하고 교육행정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직전 정부 대통령은 교육에 대하여 전문성이 약한 장관을 인선하여 교육에 어려움을 초래한 바 있다. 코로나 판데믹에 이르러서 교육부장관이 학교 개학을 두고 의사결정을 적확하게 하지 못하여 학생 학부모들을 우왕좌왕하게 하고, 대학 입시 스케줄 차질이나 언급하는 등 교수학습 활동의 본질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테니 교원 수를 감축하고 교대, 사대 입학 정원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여 교원을 숫자로만 대하고, 인건비 먹는 하마(Hippo)로 취급하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교사의 업무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회와 교원의 현실에 관하여 통찰하지 못하고, 단지 인건비 얼마 차지한다는 개념 밖에 없었던 듯하다. 오늘날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학부모 민원 대응에 힘겨워 사망하곤 하는 현실이 어제 오늘 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교원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심한 인물이 교육부장관 직에 있으면서 교육행정을 방기하여 긴 시간 축적되어 이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게다가 학교를 주민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주민의 체육, 문화, 여가 활동 등 시설로 쓰게 하겠다는 ‘학교 복합시설화’를 발표하는 등 학교의 목적을 몰각시키는 교육행정을 행하였다. 수십만 교원은 이러한 인물이 교육부장관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하며 교육을 몰이해하고 교원을 경시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보며 실망하였고, 교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으며 국정에 매진하는 현 정부에서 대통령은 교육의 본질, 학생 교육의 중요성, 교원의 위상을 이해하고 국가의 미래와 교육을 설계할 안목을 갖춘 인물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업무와 근무 고충을 헤아릴 정도의 인물이 교육부장관이 되어야 교원에 대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고생해도 고생하는 줄 공감하고 알아주면 위안이 되어 근무할 기운이 나는 것이다. 그래야 저하된 교원의 사기가 조금이라도 진작될 수 있다.

V. 교원 사기 진작 정책

1. 대통령의 교육관

한국에서 대통령은 국가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자이다. 현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밝혔듯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그 리더십과 통치 철학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표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국가 발전에 활용하여 성공을 거둔 지도자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 교육의 중요성과 교원의 위상을 인식하여 직전 정부의 국정 기조와 교육 정책에서 기인한 교육 경시와 교원 무시 관행을 바로잡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교원들의 호응을 받을 것이다. 교원에게 교육 활동상 권한을 부여하고,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들이 당당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되고, 교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다.

대통령은 교육 정책에 관하여 결정할 때, 소관 부처인 교육부 장관 부총리를 통하여 보좌받을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교원에 대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원 직렬 경력에 있는 인물을 보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교원 수 관련해서는 초등 담임교사 사망 등 현 상황을 보더라도 교원 수를 줄일 때가 아니고, 한 사람의 교원이라도 근무조건을 유지시켜 주며 학부모 민원 지옥에서 희생되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보호해야 할 때임을 대통령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장관의 설득이 미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 예산 부처로 하여금 인구 감소 시대에 앞서 교원 수 감축, 교원 양성 대학 입학 정원 감축한다고 발표한 직전 정부의 방침을 백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육부장관을 교원 직렬 경력자로 임명

교육부는 소관 인원이 최대인 부처이고, 교원 직렬 인원을 통할하는 부처이므로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교원 출신으로 보임해야 교원에 대한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교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다. 알아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을 해야 정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이 교원을 알고, 교사의 업무를 알아야 교원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장관이 교원 직렬 경력자라야 현장 교원의 업무와 고충을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7월 18일 발생한 “초등 교사 교내 사망 사건”, 소위 ‘서이초’ 사건을 기점으로 급격히 저하된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는 공감하고 교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교원 직렬 경력자의 교육부장관 보임이 시급하다. 교원 출신을 교육부장관 부총리로 임명하되, 앞으로도 교원의 사기가 유지되도록 “교육부장관은 교원 직렬 경력자로 보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소관 인원이 많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는 부처인 만큼 차관을 2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차관 2인 중 1인 이상을 교원 직렬 경력자로 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 직렬에는 교사 교감 교장, 원장 원감, 대학 교수 총장 등 인원이 해당된다.

3. 교사의 교육전문성 존중

최근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교사에 대한 학부모 폭력 사건도 보도되곤 한다. 그런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어서 문제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발달 상황 기록부이다. 교육전문가로서 학급 담임교사로서 학생의 과정과 성과를 요약하는 공문서이자 교육전문가의 평가 기록부이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행정은 학생 기록부 기재 사항은 학생이 대학 진학할 때 자료가 되어 입시에 불리하게 사용될지도 모르니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도 동료 학생을 때리고 갈취하고 인터넷 모욕으로 인격말살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도 감춰 주고 미사여구로 장식하게끔 하고 있다. 재학 중에 학생이 교사를 때린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다면 이는 교육의 직무 유기로 교육행정의 포기해당된다. 그런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학교생활기록부라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공문서의 기능을 잃는 것이다.

담임교사가 교육전문성에 입각하여 학생의 교과, 생활, 정서 등 전반을 평가하고 요약 기재하는 공문서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교원의 전문성,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는 한 교사의 권위는 없는 것이고, 교원의 사기는 저하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교원은 대학에서 4년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이다. 학생을 사랑하

고 존중하며 교육하는 교육전문가인 한국의 교사들은 교육적 판단으로 학생의 학교 교육 과정상 성취를 잘 평가 요약 기재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자 학생의 앞날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편견과 왜곡은 절제할 것이다.

교육부는 학급 담임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전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

4. 교원단체의 활동

한국에서 1980년대 이래로 교원단체는 세 가지 목표를 두고 활동하였다. 사회 민주화, 교육 개선, 교원 복지의 세 가지이다. 민주화가 진전되기 이전에는 세 가지 목표 중 사회 민주화에 주력하였다. 민주화가 전반적으로 달성된 즈음에는 교육 개선 목표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주력 활동은 교과 연구, 학생 기본권 등 주제 관련이다. 상대적으로 교원 복지 증진 목표는 전면에서 내걸어지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 민주화, 교육의 구성원 중 교사의 전문성 부문과 학생에 대한 존중 등 측면이 개선되었으니만큼 교원 복지 증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초등 교사 교내 사망” 사건을 보도로 접한 이후, 교원 노조, 교총 등 교원단체가 좀 더 집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드러 내어 해결 노력을 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산업화 시대, 사회 민주화 운동 시절, 최근의 학생 인권 정착의 시절 등을 거치며 노력하고 고생해 온 한국의 교사들, 이제는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직업 집단으로서 교사 자신을 위한 복지 증진을 제1 목표로 삼아 처우, 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집중하고 진력하여도 박수받을 것이다. 교사들의 고충, 근무 조건 관련 제기, 교원 정책안 제시 등을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교원 단체 본연의 활동이 기대된다.

정부도 교원단체의 위상에 주목하여 활발히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평소에 교원단체가 교원 근무 조건 관련 요구를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 정책화, 법제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 교원이 고통받고, 사망하기까지 하는 등 교육자의 희생이 없기를 기대한다.

5. 교육 인원 재정 투입

미국 등 교육 선진국에 있고, 한국에는 없는 새롭고 효과적인 요소를 보면, 한국에서도 시행되었으면 하고 부러워한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을 바라는 내용은 대부분 인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예산도 큰 규모의 추가 투입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 ‘에휴, 한국에서 시행되려면 멀었지 ... ’ ” 하며 아쉬워하곤 한다. 이제는 한국의 생활 수준과 교육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부러운 내용이 전에 비하여 줄었지만, 그 중 이삼십 년 전 쯤에 부러워했던, 지금도 한국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는 부러운 한 가지가 학급 보조 교사(‘Substitute Teacher’)이다. 교실에서 쉬는 시간 등에 정 담임교사 외에 학생을 살피고 관리하는 학급 보조 교사이다. 초등학교에 이 보조 교사가 있으면, 정 담임교사는 휴식 시간만큼은 교실과 아이들을 잊고 잘 휴식하여 교수 학습 활동, 교재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급 수에 해당하는 교사 인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한국 정부 당국에서는 예산 소요에 놀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교원의 교육 활동, 학생 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려면 많은 인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대규모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줄이겠다는 직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백지화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교사의 업무를 살펴 보고, 인구 감소와 학령 인구 감소를 인건비 절감 찬스로 보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일 호기로 활용할 구상에 착수하기를 기대한다. “초등 교사 교내 사망(2023. 7. 18)” 사건, 소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하여 교원을 위한 교육행정학적 관점의 정책 방안이 제시되어도 정부 입장에서 그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인원과 예산의 추가적 소요가 부담된다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을 존중하며 교사의 근무 조건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구호로만이 아니라 인원과 재정 투입으로 화답할 때, ‘서이초’ 사망 교사를 슬퍼하며 추모하는 교사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될 때, 교원의 사기는 충천(衝天)할 것이다.

2023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지역, 국가와 고등교육 경쟁력:
전망과 과제

발 행: 2023년 12월 2일

발행인: 이종재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주 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902호
(마스터즈타워 빌딩)

E-mail: keas1967@daum.net

홈페이지: <http://www.keas1967.com>

인쇄처 가람문화사(02-873-2362)

<비매품>